

01

민생 제일주의 실현

- 01 활력 돋는 민생
- 02 체감하는 양극화 해소
- 03 건강·안전 걱정없는 사회
- 04 탄탄한 돌봄교육책임
- 05 다함께 문화향유 시대



01

활력 돋는 민생



01

활력 돋는 민생

온전한 손실보상과 매출증대를 통해
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
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

-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의 손실보상 제도로 개선
- 손실보상에서 제외해온 인원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등

○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 도입

-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신규 도입

○ 지역사랑 상품권,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
-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상시지원 및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
- 지방정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고객유입을 통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

○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

-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신용등급 회복 지원

- 회생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실시
- 대환대출, 무이자 대출 등 포용적 금융정책 확대
-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 실시

○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회복지원 기금 확대

- 워드코로나 방역체계, 손실보상, 빅데이터 플랫폼 등 원활한 소상공인 회복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소진기금 확대 편성

○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기반 확충

-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기준을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율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
- 지역신보재단중앙회 재보증 운용배수를 신·기보와 동일한 적정운용 배수 수준으로 개선

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혜택(복지) 확대

- 노란우산공제 최소납부금액 완화 등 신규가입 업체 지원 확대
-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임의해지시 퇴직소득세 적용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지원

- 폐업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
-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적시폐업 후 신속한 재도전 지원
-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, 가맹 · 대리점 계약 등의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 및 면제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강화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

- 폐업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 · 재창업 관련 교육 · 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

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○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

-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

○ 자율적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

-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의 임대료 분쟁 해결을 위한 '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절차' 활성화
- 차액감액청구권 교육 및 행정지원, 분쟁지원 강화

○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

-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 · 영업제한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,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제도 도입
-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, 갱신거절,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

○ 임차상인의 단체협상권 보장

- 임대료,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○ 장기안심상가 및 공공안심상가 지원 확대

-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및 공공안심상가 전국적으로 확대

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반영한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확대

- 테마 또는 특색 있는 상권으로 재생시키는 상권르네상스 지정 확대
-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, 온라인 판매, 복합체험 판매 라운지 등 패키지 지원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확대

○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

-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별 맞춤형 지원
- 골목형 상점이 지정 요건 완화 등 상점이 활성화 촉진
-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연계강화를 통한 특색 있는 상권 조성
- 지역의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유통물류센터(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), 공공 플랫폼 및 재할용센터 설치 및 지원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전문성 강화

- 창업전 필요한 창업교육을 통한 실패의 위험 최소화
- 장인 · 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 · 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 위기신호등 개발

-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방안 매뉴얼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

- 경력단절 여성, 취업준비생,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활성화

○ 각 지역별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지원

- 상권활성화재단, 시장상권진흥원 등 설립 지원
-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(상인회, 협동조합 등) 설립 지원

작지만 강한 소공인에 대한
지원을 강화하여
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.

○ 지역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

- 광역별 1개소 구축, 일반에 개방하여 지역 특화업종 경험 지원

○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

-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
-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상, 공동연구개발,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적극 지원

○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
-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비 지원 확대
- 공정 자동화,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

○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

-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시

06

활력 돋는 민생

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
채무부담을 경감하고
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코로나19 이후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
-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단행

07

활력 돋는 민생

사회적 약자에 대한
법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
 - 임대차 기간 단계적 확대 추진
 -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
 -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과 편법인상 방지 방안 마련 검토
- 미성년상속인의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
 - 성년 후 한정승인 제도 도입

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○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대폭 확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

- 현행 전체 대학생 48%에 불과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70%까지 확대

○ 지자체 차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, 졸업한 청년 부담 완화

○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대폭 확대

- 가구 소득 분위 자격요건 제한 폐지로 학부생 누구나 실질적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- 등록금 부담 높은 전문대학원(로스쿨 등)까지 확대 적용

○ 사교육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교육플랫폼 구축

- EBS 온라인 학교 전환 및 교재 온라인 탑재, 취약계층 교재 무료 제공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
- 중·고교 시험, 교과서 밖 출제 금지 및 수행평가 공정성 강화
- 사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해 사교육 현황과 원인 등 상시 점검

공공기관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 탐색비용을 줄이겠습니다.

○ 공공기관의 임·직원의 임금 분포를 알리오(ALIO,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)에 공시

- 성별과 정규직·비정규직을 구분한 임금 분포 공시

10

활력 돋는 민생

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실현하겠습니다.

-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주식양도소득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산업을 육성
-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과세하되, 투자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

11

활력 돋는 민생

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.

-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의 기본 철학을 시혜와 지원에서 권리와 자기결정으로 전환
- 정보접근권, 이동권, 지역사회 자립생활권, 문화권, 생활보장권, 노동권, 교육권, 건강권, 가족생활권, 재활권 등 장애인의 제 권리의 체계적 발전 토대 마련

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없이
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
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장애인연금을 종전 소득하위 70% 1급, 2급, 3급 대상에서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추진
- 장애인연금 지급시 부부 감액을 폐지
- 장애(아동)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%로 단계적 확대

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
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.

-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
- 사회복지 종사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단일임금체계 도입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

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중증요양 가산수당 확대,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,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 및 업무 숙련 보상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

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,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.

-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‘연금개혁위원회’ 운영
-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재계산과 연계하여 연금개혁안 마련하고 국민 동의 바탕 개혁 추진

16

활력 돋는 민생

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현재 80만 개인 어르신 일자리를 140만 개로 확대
-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 및 지역 상생 활동사업 전국 확대

17

활력 돋는 민생

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
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,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
-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프로그램 다양화

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사회보험을 만들겠습니다.

○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으로 사회보험 개혁

- 영세자영업자, 비정규직,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
- 복잡한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마련
- 지역 건강보험료 형평성 제고

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○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

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
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.

○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,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
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

암 경험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암 경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준을 마련

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
혁신정부와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.

○ 정부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

-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부투명성 위한 '정보공개법' 개정
- 적극적인 국민 권리구제 위한 '국가옴부즈만위원회' 설치 검토
- 공직자 청렴성과 부패방지 강화 위한 '국가청렴위원회' 설치 검토

○ 국민 주도의 열린 정부 혁신 추진과 정책 혁신

- 국민 주도형 열린 정부혁신 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
- 디지털 가상정부(메타정부) 구축 통한 정부혁신과 정책혁신

실업 예방과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
플랫폼종사자와 소상공인의
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프리랜서 및 플랫폼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직업 안정과 역량 함양 추진
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

보건증 발급비용 국가 지원 및 타투 합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○ 보건증 발급비용 국가 지원 확대

- 돌봄 · 가사노동자도 포함하여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무료화
- 발급 지정병원 확대,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
- 산모 · 아이 · 가사돌보미 등 검진과목 표준화

○ 타투 합법화 추진

- 국회에 계류중인 타투 합법화 법안 적극 추진
-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 위한 위생관리체계 구축



02

체감하는 양극화 해소



01

체감하는 양극화 해소

지자체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
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.

○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차별 개선

-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
- 공공부문 건설업에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조달영역에 확대 도입
- '경기도형 비정규직 공정수당'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
-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방안 마련

○ 상시·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

- 상시·지속 업무, 생명·안전업무 등 필수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명시
- '고용보험 경험요율제' 도입 방안 추진

○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

-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, 표준임금체계 등 임금제도 관련 개혁 추진

○ 비정규직·미조직노동자 이해대변시스템 구축

- 노동관계법령 상 "근로자대표" 제도개편으로 비정규직 대표 참여·활동 보장
-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동상담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지역밀착형 노동지원센터 전국확대 추진
-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각지대인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노동복지기금 조성 지원
- 노동조합 미 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을 위한 '한국형 노동회의소' 설립 추진

○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

-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
-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 고용 등 노동관계 승계

플랫폼 · 특수고용노동자,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

○ ‘(가칭)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’ 제정

- 근로자든 플랫폼 ·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든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
 - 차별받지 않을 권리 ·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 · 공정한 노동제공계약을 체결할 권리 ·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장

○ 플랫폼 ·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보험 · 산재보험 적용

- 전국민고용보험 기반인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체계 조기 구축(~'22년내)
- 특고 ·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'22년 7월까지 차질없이 실현
-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'23년내 마련, '24년내 '전국민고용보험' 실현
-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
- 타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'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'까지 포괄하는 산재보험 제도 도입
- 농업, 임업, 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(장)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

○ 플랫폼 ·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산후휴가(급여) 및 육아휴직(급여) 보장으로 일 · 가정 양립 지원

○ 플랫폼 ·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'전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체계' 구축

-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· 지원기간 · 지원수준 단계적 확대
-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수준 확대
- '직무능력은행' 구축으로 개인이 교육 · 훈련 등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 통합 관리 · 활용
- 정부-지방정부-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 개발

노동관계법의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

- 근로시간 외 SNS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
- 시간외근로(초과근로)수당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금지
-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
- 가족돌봄휴가 대상 · 기간 확대 및 휴가시 유급지원, 사용권 보장
- 노동자 건강권 및 기업 생산성 향상 위한 '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' 제시
- 4.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
-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.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

○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 추정 입증책임 전환

- 오보류 및 위장도급 근절 위해 근로자 추정규정 신설 및 입증책임 전환

○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

-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 추진 지원
- 자발적 이직자의 생애 1회 실업(구직)급여 보장
-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는 급격한 소득 상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○ 후진적 산재사망 'Zero' 추진

-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단위 원 · 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-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화 및 안전보건교육 확대
-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할증제도 강화
-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폭 지원
- 직업 · 건강위험요인별 맞춤형 건강진단(비) 지원
- 아간노동 과로사 방지 및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애 예방 방안 마련

○ 산업안전보건 감독강화

- 매년 기업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, 사고사망 등 산재발생현황,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는 '안전보건공시제' 단계적 도입
- 신재생 · 수소 에너지 등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기준 마련
- 도급 위험작업시 2인 1조 이상 작업 등 예방조치 강화

○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

- 폭염, 혹한 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직업중지권 도입
- 일정 규모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

○ 산재보상제도의 보장성 강화

-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 '선 보장 후 승인'(상병수당 연계) 제도 도입
-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추진

○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,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

○ 고액 ·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

- 임금채권의 시효 연장 추진
- 고액 ·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 및 공공입찰 제한
- 피해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편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

‘노조 할 권리’를 보장하겠습니다.

○ 각종 고용 · 노동정책 수립시 경제사회주체인 노 · 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

○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

- 사용자 및 근로자개념 확대
-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· 행정적 노력

○ 「헌법」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

- 교원 ·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
- ‘노동쟁의’ 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
-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

○ 사업(장) 취업규칙(사용자 일방 작성)을 노 · 사 합의 ‘사업장협정’으로 변경

차별없는 노동환경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

- 성별 · 학력 · 고용형태 · 직종 · 근속연수별 등 임금정보 공시,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
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제도개선과 대상기업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
- 공정임금법(EqualPay Act) 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
- 성별 집중 직종 직무가치 평가 및 차별적 임금격차 시정
- 성별 임금차별 직권조사 및 시정 권한 제도를 통해 실효성 강화

○ 노동위원회 산하 (가칭)고용공정위원회 설치

- 시정명령권을 갖는 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· 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

○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

- 성차별, 성희롱 사건의 지도 감독 및 진정 처리 추진

○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

○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

○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 추진

○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

○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지원

- 청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여성 일자리 특성 고려 기본계획 수립
-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금 상향 지원
- 여성참여가 저조한 4차산업, 디지털정보통신 기술 등 지속적 능력개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

코로나 교육결손을 회복하고,
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.

○ 교과보충, 튜터링, 정신건강 상담·치유 등 지역단위 학습결손 회복 프로그램 추진

- 2026년까지 방과후 및 방학 기간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습과 상담,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·운영

○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, 지역 인프라(도서관·청소년 시설) 활용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확대

-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본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
-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, AI를 활용한 K-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학습 역량 진단 및 학습보정 실시
- 중3단계에서 희망학생 및 학교에 대해 기본학습역량 진단 후 학습보충 지원

○ 취약계층(저소득층·장애학생·다문화가정) 지원 강화, 지역단위별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 확대

- 지자체 청소년 시설 확대 및 개방,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
- 중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 대상 보충학습·진로체험 제공 전환학교제도 도입
-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 강화 및 프로젝트 중심학교(오디세이 학교, 몽실학교 등) 운영 확대

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
‘빈곤 제로’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.

○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
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
-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절대빈곤선인 중위소득 30%에서 상대빈곤선인 50%까지 단계적 상향 검토

‘제대로 된 한 끼’,
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.

-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
- 아동급식카드와 일반체크카드 디자인 통일
-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

더 세심하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
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만 3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

03

건강·안전
걱정없는 사회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
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,
의료인 처우도 제대로 개선하겠습니다.

○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

- 내실있는 의대 운영을 통해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
-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공 ·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

○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

-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별도의 수가 가산제 도입
-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 확보하도록 시스템 개편
-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

○ 지역의사제,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 · 필수 의료인력 대폭 확충

-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 집중 선발 · 육성
-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보
- 간호인력 확보 · 적정배치 ·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· 제도적 기반 마련

○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

- 지역의료기관 수련과정 지원 확대, 적정인력기준 마련

전국에 골고루 공공병원을 확충하여
지역의 필수진료 역량을 키우고,
의료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.

○ 지역별로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·증축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

-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
- 국립대병원 신·증축하고 지역 병원들과 진료협력체계 구축

○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·정책적 지원 확대

- 지역·필수·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
- 지방의 의료역량 강화로 주민불편 해소 및 건강권 강화

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○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

- 간호·간병 인력 배치기준 적정화, 간병비 급여화 확대 추진

○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적용 확대 추진

- 불필요한 입원, 사회적 입원 등 방지대책 병행 추진

○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·간병 인력 처우 대폭 개선

- 간호·보조인력 처우개선 및 간병인력 자격화로 효율적인 팀간호 체계 확립

○ 교육 전담 간호사제와 교대 근무 방식 개편으로 병원 근무환경 개선

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와
방문 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거동 불편 환자의
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

-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
-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체계 정비
-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

○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로 '집으로 찾아가는 병원' 사업 확대

-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
- 한방 · 재활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

○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

-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 심야 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
-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및 상담, 사회안전망 연결 서비스 제공

노인 임플란트, 탈모 치료,
아동 · 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등에 대한
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적용대상 및 급여기준 확대

-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인하
-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4개 건강보험 적용(현행 2개 + 추가 2개)
-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경우도 임플란트 급여 동일하게 적용

○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

-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적정수준 급여기준 마련
-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추진

○ 아동 · 청소년에게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추진

- 성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중증아토피 치료제 허가 범위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아동 ·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추진

보험재정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
과잉진료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
완전히 척결하겠습니다.

○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
- 경찰과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

○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

-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 지원

○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

-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, 부당이득 환수 근거 규정 정비
-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,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 · 추징 추진

건강보험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
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
대폭 완화하겠습니다.

○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

-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한 재산공제액 기준 개선안 마련

○ 재산공제액 기준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

-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적용(2022. 7) 시기에 맞춰 조정
- 517만 세대 보험료 월 5만원 인하 효과 달성을 통해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

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비롯한
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
○ 24시간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

-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24시간 핫라인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
-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 국립정신병원 전담인력 확충

○ 환자 차별 방지, 수가체계 및 환자이송제도 개선

- 민간·실손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
-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

○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

- 지방정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마련 및 정부지원 강화
- 진단 전 초기 단계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

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약품 공공생산을 통해
백신주권과 보건의로 안보체계를
확고히 하겠습니다.

○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적극 추진

-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&D 집중 투자 및 전문인력 적극 육성
-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반 확립으로 안정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체계 구축

○ 코로나19 백신, 치료제 자체 개발

- 국내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및 신속 심사·허가 체계의 신뢰성 확보
-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완료로 백신주권 확립

○ 필수약품의 공공생산체계 구축

-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
- 정부 투자시설 및 민간 유희시설 활용한 필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

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
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
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.

○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

- 정부 지원 대상 · 기준 명확화 및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
- 국내개발 · 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

○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

- 희귀질환 치료제,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 강화
-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 구현

○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

-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
- 고위험 · 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 마련

성폭력, 가정폭력, 스토킹, 데이트 폭력 등
젠더폭력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○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

-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

○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

○ 스토킹 ·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· 지원 강화

- ‘스토킹 피해자 보호법’ 제정
- 스토킹 ·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‘보호명령제도’ 도입 및 강화
- 피해자와 주변인까지 신변안전 보호조치 강화, 신변보호 전담 경찰인력 확충
- 피해자보호조치 위반시 형사처벌

○ 스토킹 범죄, 데이트 폭력 피해(성별, 연령, 유형, 재범 등) 통계 관리 강화하여 범죄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

○ ‘온라인 스토킹’ 등 스토킹 범죄 행위 유형 확대

- SNS등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글이나 그림 전송, 개인정보 게시 · 배포 · 유출 행위 범죄화
- 메타버스 등 신종 플랫폼에서의 아동성착취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
- 불법적 위치추적 시스템(GPS)을 통한 피해자 감시 행위

○ IT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· 데이트폭력 범죄자 접근 차단 등 선제 조치 강화

- 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의무등 접근 거리에 따른 자동 경보조치 실효성 강화

○ 상습적 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

-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불이익 금지,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- ‘폭행 또는 협박’ 없는 성폭력 피해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강간죄 구성 요건 개정 검토
-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 사실을 침묵시키는 무고죄 강화, 가해자의 악용 수단화 제재
-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 시설 다양화
 -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강화
-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
- 수사 과정, 민 · 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사회,
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
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.

- 디지털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
 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정규직화로 전문성 · 안정적 업무 지원
-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로 전문성 및 수사력 강화
 -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조사 및 국제공조 관련 전문인력 확충
-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 · 영상에 ‘표시의무제도’ 도입
- ‘독립몰수제’ 도입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체계 강화
 - 범죄수익 환수금 피해자 지원 예산 편성
-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
 - 변형카메라 제조 · 수입 · 판매 및 소지 등 관리제 도입
 -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,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
 - 불법촬영 단속 탐지기 고도화와 공급 확대
-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기술개발 투자
- 전국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

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평등한 가족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.

○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구조와 권리 개선

○ 1인가구, 친밀한 관계 등이 돌봄 · 의료 · 장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‘연대관계등록제’ 도입

- 친족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제도, 보험 지정대리인청구제도 등 민간 영역의 다양한 차별과 불이익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

○ 1인가구의 안전 · 건강 강화 및 사회적 고립 방지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

-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모델을 강화 · 보완, 1인가구 밀집지역에 설치 운영
-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
- 1인가구가 치매 · 질환 · 고령 · 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제도 활성화

○ 가족구성원의 인권존중과 가족내 불평등 해소

- 고정적인 성역할 해소, 가사와 돌봄의 균형 등

○ 태어난 모든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의무적 출생통보제 도입

- 의료기관 및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의무 부과

○ 자녀의 성(姓) 결정 선택권 보장

-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로 변경

○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제도 강화

- 한부모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대상의 소득기준 폐지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확대(중위소득 80% 이하)
- 한부모가족, 미혼모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방지 교육 강화

○ 양육비 이행 강화 및 추진체계 강화

-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이행률 제고
- 양육비이행관리원 특수법인화로 역할 및 서비스 강화

산불대응 소방설비 확충으로
국민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.

-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조기 완료
- 산중턱 소방호스 보관함 설치 전국 확대

소방관의 건강과 복지를
국가가 더 책임지겠습니다.

-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
- 소방관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예방 · 관리를 위한 힐링센터 설치
- 119구급대 4조 2교대제 도입으로 대국민 119구급서비스 제고

20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우리 사회 영웅,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.

- 소방 · 경찰 등 제복입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

21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경찰 · 소방 책무에 상응하도록
처우와 보수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경찰, 소방,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 편입

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
생활안전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.

○ 자율방범대, 녹색어머니회, 모범운전자회 등 치안봉사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

공인탐정제 도입을 통해
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공인 탐정자격증 도입

- 공인탐정의 실종자 수색, 물건의 소재파악, 개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조사 업무를 통한 국민 편의와 안전 강화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운전면허증을 반납한
어르신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습니다.

-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고연령 어르신께 지역화폐를 지급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
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자전거 도로 5년간 30% 이상 확충 및 전국 자전거보험 도입 추진
- 도난방지장치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 확대 및 자전거 관리제도 개선

전국 어디서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
숨 쉴 수 있는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겠습니다.

○ 촘촘한 미세먼지 발생 관리체계 구축

- 배출단속기준 상향, 적용 대상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강화
- 교통 분야의 저배출 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변 대기질 측정소 대폭 확충
-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 · 영세 사업장(4~5종)의 방지시설 및 실시간 배출 모니터링 설비에 대한 설치 · 운영 지원 확대
-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확대 및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도입

○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

- 사물인터넷(IoT) · 빅데이터 · 인공지능(AI)을 융합한 생활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'스마트 클린 도시' 구축 추진
- 어린이 · 청소년 통학 · 통원차량의 무공해차 전면 교체 신속 추진
-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
-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상습 교통체증 구간의 오염물질 확산 방지 추진

○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

- 한 · 중 대기질 개선 양국 협력체계 '청천 계획'의 실효성 강화
- 동북아 대기오염방지 정보공유와 기술협력 추진 (기술협력 전용 플랫폼 구축)
- 유럽 대기오염물질의장거리이동에관한협약(CLRAP)을 모델로 한 '아시아 · 태평양 다자간 대기협약'을 주도적으로 추진

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,
합리적인 수도공급 시스템으로
지역 간 차별 없는 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.

○ 수돗물 수 공급의 평가시스템 도입 및 시민참여 활성화

-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'수돗물 안심 서비스' 전국 확대 추진
- 원수 평가, 관망관리 평가, 정수 평가,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수 공급 안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시민참여 확대를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안전 수도정책 수립 지원

○ 지역간 물복지 형평성 제고

- 수도사업의 지역간 통합을 추진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수돗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시행

○ 30년 이상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확대

- 국고 보조를 통한 취약계층 등의 자부담 완화 및 교체 대상 확대 추진

4대강과 지류 · 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.

○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유역별 통합물관리 강화

- 4대강 보 처리 방안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연성 회복 종합대책 수립 및 신속한 추진
- 댐, 하천 등 유역별 물관리 기능 이전 · 통합을 통해 물관리 효율성 증대
- 유역주민 물관리 참여 활성화 및 강 문화 복원 · 전승과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

○ 지류 · 지천 연속성 증진 사업 확대

- 지류 · 지천에 설치되어 있는 중 · 소형 보 평가(기능, 수질 · 생태 영향 등) 및 연속성 증진 사업 추진

○ 유역별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개선

- 유역 수질에 영향이 큰 대규모 처리장 중심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시설 고도화 추진
- 유역 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강화 기준 설정

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.

○ 기후 ·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서비스 제공

- 기후변화 건강 취약계층, 기후 취약지역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지원 방안 마련
-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체감형 환경보건 진단 체계 및 서비스 제공

○ 유해 ·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

- 화학물질안전원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
- '정보없는 화학물질의 시장진입 금지'(No data no market) 원칙에 따른 기업의 독성물질 등록 강화
-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제조 · 수입 · 사용 · 폐기 등 화학물질 전생애(Life-cycle) 통합정보전달체계 구축과 대국민 정보 제공
- 어린이 · 학생 활동 공간 납 · 석면 등 '유해물질 제로(환경안심인증)' 확대 지원
-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지속적인 추진

○ 환경피해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실행체계 구축

-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, 피해에 따른 신속한 구제 · 조사 및 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· 독성물질 관리 전담기구 설치
- 환경성질환 연구, 진단, 치료 및 재활 등을 총괄하는 전담의료기관 확대 추진

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혁신으로 안심 농정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**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임.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**
- **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· 개편으로 수급안정 및 최저 가격 보장 효과 제고**
 - 무,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%까지 확대 추진
 - 대상 품목 확대, 적정기준가격 설정, 농업인과 조합의 분담율 경감 등 개선
 - 주요 작물의 저장 · 가공 · 유통 및 출하조절 시설 확충
- **농식품 온라인거래소를 만들어 농식품 온라인 유통 고속도로 구축**
 - 산지거래 확대와 유통시설 스마트 시스템 강화
 - 전국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 및 광역별 물류거점 도매시장으로 육성
- **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**
 - 농협 조합간 지역별 · 품목별 연합 체제 강화로 조합원 생산농산물 책임판매 확대
 -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확대, 지역 의무자조금 도입, 사전적 생산조절 및 소비홍보 위주 사업방식 개선 등 자조금 제도 개선 추진
 -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역할 확대, 자율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등 축산물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 조절 기능 강화 추진
- **생산에서 소비까지 디지털 정보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사전적 수급 예측 · 관리 강화**
 - 농지, 농산물 생산 · 수입 · 가공 · 소비 등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및 디지털 유통관련 제도와 불법유통 단속체계 정비
 - 블록체인, 이력추적기술을 이용한 유통 · 거래 디지털 안전망 구축 등 디지털 유통관련 제도와 불법유통 단속체계 정비

스마트 유통시설 개선 및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**시설 개선이 시급한 노후 위판장을 저온 유통시설로 현대화**
 - 50개소 신축(위판 가능 상실 또는 20년 이상 노후화) + 리모델링 50개소
- **방사능 검사 장비 · 인력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**
 - 방사능 검사 장비는 위판장을 운영하는 수협조합 단위(50개)로 지원
- **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**
- **어민 양식보험 국고보조를 확대 추진**
- **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국가 어업지도선 확대 및 노후선박 대체건조**
- **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수산업 전환**
 - 친환경 어선 개발 및 어선대체 지원
 - 블루카본 해조류 · 패류 양식 추진과 바다숲 조성 지원
- **가두리 양식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R&D지원 확대**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‘유니버설 디자인’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.

- **배리어 프리(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)를 넘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‘유니버설 디자인’ 환경 구축**
- **장애유무, 성별, 연령, 언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공간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와 법률 제정 추진**
 - 교통, 건축, 도시, 제품, 환경 등에 종합적 · 체계적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
 -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시행으로 기업참여 유도

건강 · 안전 걱정없는 사회

전문 수어통역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**의료 · 법률 등 전문 분야 수어통역 교육과정 마련**
- **수어통역센터 배치 확대**
- **의료기관, 관공서에 전문수어통역사 배치**

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.

- 안전 책무를 강화를 통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
- 건설근로자 사고 피해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의무화
- 건설공사 일요일무제를 공공건설현장에서 모든 건설현장으로 단계적 확대
 - 단, 건설공사 특성(재해복구, 격·오지, 도로 긴급보수 등)을 고려해 발주청 사전·사후 승인을 통해 일요일 공사 허용
-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의무 도입 의무화
- 공공입찰 건설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



04

탄탄한
돌봄교육책임

01

탄탄한 돌봄교육책임

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어르신, 환자, 장애인, 아동, 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.

○ 방문간호 및 방문돌봄 확대를 통한 돌봄 필요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 경감

-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적 확대
-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 구축
-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

○ 간호간병 통합돌봄 강화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

-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
-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
- 간호·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

○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 기반 강화

-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
-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

○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등을 통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

- 누구나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보편화 실현
- 초등돌봄교실과 마을 돌봄시설 획기적 증설, 돌봄전용교실 개선
- 국무총리 소속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,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

○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 획기적 증설 통한 초등돌봄 서비스 강화

-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 제고
-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 제공
-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% 이상으로 확대
- 교사의 임금 격차 해소 추진

모든 영유아에게
균등한 유보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.

- 유치원/어린이집 교사 양성 · 자격 기준 및 처우, 시설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, 재정지원 및 행정관리 등의 격차 문제 단계적 해소
- 동일한 종류의 시설(어린이집/유치원) 내, 사영(私營) 시설과 국공립 시설간 격차 문제도 해소

생활시설과 복지시설을 구비한 아파트 형태의
어르신 공동거주 지원주택(supportive housing)을
대폭 확충하겠습니다.

- 아파트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. 독립된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
-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및 빨래방, 물리치료실 및 요양보호실, 복지관 및 사랑방 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및 복지, 여가활동 등 지원
- 어르신 등이 도심에 위치한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, 가족(자녀)과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- 또래와 발달양상이나 행동이 다른 ‘발달지연 영유아’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· 치료 등을 연계하는 ‘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’를 전국으로 확대
 - 전국 시 · 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, 지원 프로그램과 치료 지원체계를 운영

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!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.

-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

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
마음껏 누릴 수 있는
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
-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 · 가사간병 · 생활지원 · 의료 · 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재가(방문) 요양 · 가사간병 · 생활지원 · 의료 · 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
-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· 장애인 · 아동 · 병약자 등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공공 의료 ·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
- 지역사회 의료 · 돌봄 서비스 One-Stop 신청 · 연계 · 공급체계 구축, 돌봄 매니저(care manager) 채용 추진

장애인의 삶을
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.

○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

-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'국가장애인위원회'로 격상
-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
-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
-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
-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및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

○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 · 교육 기회 확대

-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
-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,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
- 장애학생 통합교육환경 조성
- 대학 진로지원 강화,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, 발달장애 학생 지원 전담 직원 배치
-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문화 · 예술 · 관광 프로그램 확충

○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

-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교통이용,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진
- 유니버설디자인 추진
-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확충
-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
-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량 기준에서 사람 기준으로 전환

○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

-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
-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및 맞춤형 사회참여,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원체계 확충

-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, 양육자 상담 · 코칭 서비스 지원

○ 발달 ·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

-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
-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법제화,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, 24시간 지원체계 구축
- 위기쉼터, 24시간 이동지원, 응급병상 등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 확립

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중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○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미혼부 출생신고 간소화 제도 마련

-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시행

○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

- 친권상실 · 제한 사유 구체화,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
- 공적 입양체계 구축
- 영케어러, 수용자 자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및 지원

○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

- 아동의 '놀 권리' 보장, 놀이시간과 공간 확충, 연령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
- 아동의 정신건강 대응 전문인력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
-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상담 · 치료 등을 연계하는 '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' 전국 확대

○ 디지털 세상 속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

- 폭력적인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
- 키즈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 지침 보완
-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한 아동 보호 규정 마련
- 아동 전문 디지털 범죄 피해 지원 강화
- 아동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안내문 작성 권고
- 아동의 개인정보 영리적 사용 금지
-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아동 관련 항목 추가 및 대상 확대

○ 위기 아동 발굴 및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

- 아동학대 담당 부처 간 정보연계 시스템 개선
- 지역사회 보호시설 전문화, 가정형 보호 활성화
- 부모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등 행복한 원가정 지원
- 영아살해죄, 영아유기죄 폐지
- 잔혹한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
-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음주·약물 형 감면 금지
- 범부처 차원의 아동사망 조사제도 도입
- 위기 아동 조기발견 위해 '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' 사업 전국 확대

사회서비스형 치유농업을 육성하여,
복지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치유경험을,
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것입니다.

○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노인, 장애인,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로 제도화

○ 치유농장(농민)에 대해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실적에 따라 경제적 보상 제공, 농민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농촌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

- 복지시설에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실적에 따라 경제적 보상, 치유농장에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보상 제공

○ 산림자원 · 곤충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등 사회서비스로 제도화 추진

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
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
○ 학부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 확대

-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아동돌봄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,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) 확대
- 민간(사립) 아동돌봄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유도 및 활성화 지원

남녀모두 돌봄의 권리를 존중하고,
건강한 성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

○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

- 출산휴가 종료 후 연동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

○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

○ 아빠 육아휴직 권리보장을 위한 '육아휴직 부모쿼터제' 도입 추진

○ 프리랜서 · 특수고용 · 비정규직 등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

○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설치

- 안전과 합리적 서비스 표준화 및 평가 시스템 도입

○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

- 육아돌보미 신원확인 · 건강진단 발급 및 안전교육 강화

○ 남녀 청소년 대상 HPV(사람 유두종바이러스) 백신 무료접종 지원 및 연령 확대

○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

○ 산부인과 명칭을 '여성건강의학과'로 변경

○ 피임과 임신중지, 난임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- 피임과 임신중단 실태 조사 및 통계 구축
- 난임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

○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

- 임신노동자 생식독성과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인자 특수건강검진 항목 추가
- 임신노동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(60인 미만 사업체부터 적용 후 단계적 확대)

○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

다양한 계층의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국가책무 강화

-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여성전문병원 기반 마련
- 폭력피해자 쉼터 확대 및 피해구제 제도 강화

○ 여성농·어민의 지위 개선 및 건강권 강화

-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및 부부 공동 경영체 등록 제도 마련
- 여성농·어업인의 직업적 질병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

○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등 인권 보호 강화

- 배우자 유무(사망·이혼),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·귀화 정책 폐지
- 국내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피해자의 체류 보장 방안 마련

○ 북한이탈여성 맞춤형 상담 및 자립 지원 등 인권 보호 강화

-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 상담 지원 제공 확대
- 하나원의 여성인권 교육 확대 및 성차별 등 인권상담 업무 강화

아이돌봄 세액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.

- 비싼 민간 돌봄시장에 의존하는 맞벌이가정 및 한가정의 육아도우미 부담을 경감하고자, 교육비공제 형태로 육아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도입(15% 공제율, 1인당 300만원 한도)
- 민간 육아도우미 고용 증명 관련 서류 제출(통장이체내역 등)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, 현금경제로 운용되는 아이돌봄 시장이 양성화되는 효과 기대

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관리부처 통합, 안정적 자원 확보를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 격차 해소
 - 장애 영·유아 포함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는 안정적 교육 및 돌봄 기회 제공
- 중앙부처·지방정부·교육청·학부·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, 유보통합위원회 구성
-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통학버스 운영 확대 등 부모 편의 증진
 -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도시지역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비율(16.7%),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

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초등돌봄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교육청(교육지원청) + 지자체(광역 및 기초) 중심 협력체제 구축

- 지역여건에 맞게 학교안 뿐만 아니라 학교밖 돌봄교실 확대

○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

- 지역내 놀이 · 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, 초등돌봄 저녁 7시까지 운영시간 연장

○ 권역별 긴급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야간 및 토요일 돌봄수요 지원

- 과밀학급 · 과대학교 등 돌봄 수요 초과지역 시설 확충 적극 추진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

○ 사회적 일자리 활용 등하곳길 교통안전 인력 대폭 확대

학교공간 혁신, 학생 건강을 위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○ 과밀학급 · 과대학교 지역에 학교복합시설, 미니학교 설립을 통해 학급 및 돌봄교실 증설

- 교육 · 돌봄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(주차장 · 체육관 · 수영장 · 문화시설 등) 확대

○ 통합학교 및 하이브리드형 학교를 통한 농산어촌 교육 대책 마련

- 통합학교 : 초등 + 중학교 / 중학교 + 고등학교 형태로 효율적 운영
- 하이브리드형 학교 : 학교 건물과 관공서, 보건소, 마을회관, 돌봄 · 복지시설이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

○ ‘그린스마트미래학교’ 확대를 통해 넓고 천편일률적인 학교를 미래교육 · 학생 친화형 공간으로 혁신

- 현재 40년 경과 노후시설 대상 기준 완화(30년 경과)

○ 기후 · 생태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강화

-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· 대학탄소중립캠퍼스 단계적 도입
- 친환경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, 탄소중립문화 및 환경생태교육 중점 실시

○ 학생 건강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교육청 협력 강화

- 학생건강검진 주기를 3년에서 2년 주기로 단축,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편입
- 학생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급식인력 확충 등 여건 마련
- 학교 청소인력 확충을 통한 쾌적한 학교 환경 구축

생애주기별 평생교육 강화로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하는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.

○ 청년 · 중장년 · 노년 등 생애전환기별 '평생학습 계좌제' 도입

- 현행 저소득층 위주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를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

○ (전문)대학, 평생학습관, 지자체, 교육청 연계 체제를 통해 '평생학습 시민대학' 체제 마련

- 기초자치단체별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및 중앙정부 지원 체계 마련
- 중장년층의 이·전직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방

○ 비진학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및 '한국형 갭이어' 운영

○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

- 온·오프라인 교육기관 연계, 학습·훈련이력 관리시스템 제공



05

다함께
문화향유
시대

국민이 즐기고, 국가가 책임지는
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문화재정을 국가예산의 2.5%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

○ 문화이용권 제공 등 국민문화기본권 확대

- 생애주기별 문화이용권 제공 추진
- 학교 내 문화예술 · 스포츠 · 미디어 교육 확대 검토
- '1인1예술교육' 도입

○ 문화가 숨 쉬는 지역 기반 확보

- '문화도시' 확대 지정과 '3501 문화마을' 조성으로 지역문화재생 활성화
-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상생을 위한 입주형 창작공간 확대
-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확대, 자료구입비 · 주민참여 도서선정 · 사서 인력 확대
- 민간 운영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마을 단위의 작은미술관 · 작은영화관 확대

○ 코로나로 인한 신체 · 정신적 피로 극복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

- 예술인 · 예술강사 파견사업 지원 강화로 문화돌봄 확대

○ 콘텐츠의 보존, 활용, 유통을 위한 '국민 창작플랫폼' 운영

- 개인 창작 지적재산의 생산, 보존관리, 활용 인프라 구축

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 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.

○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

-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
- 예술인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확대, 문화예술인 복지금고 조성
-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
-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 기능 확대
- 문화예술인 복지사업 기준인 문화예술인활동증명 기준 개선 · 확대
- 문화예술인 활동지수개발로 체계적인 문화예술계 현황진단

○ 예술 진흥체계를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혁신

- 예술기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제 강화
- 문화예술인 저작권 보호 강화

○ 공공 기여 확대로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

- 청년 · 신인 예술가 창작품의 전국 거점 온 · 오프라인 유통지원
- 공공기관의 예술창작품 구입 확대, 국 · 공립시설 활용 창작품 전시 공간 제공, 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확대

○ 공연 분야 등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

-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예술작품 직접 제작을 통한 문화예술인 직접 고용 추진

○ 청년 문화예술인 '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' 실시와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

-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, 문화기관 이용권, 선배 예술가 멘토 지원, 전문가의 사업화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
콘텐츠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
○ 문화콘텐츠 세계2강 도약을 위한 K-콘텐츠밸리 조성

- 교육기능 · 기업맞춤형인력고용 · 기업 · 연구기관R&D의 산업화

○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성장 기반 마련

- 다양한 문화자산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 문화산업 육성
- 50만개 문화 일자리 창출, 유니콘 문화기업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
- 웹툰, 웹소설 크리에이터 발굴지원 등 1만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지원 추진
- 영상콘텐츠 제작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
-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확충

○ 공공기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지원

-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5년간 총 50조원 이상 투자, 융자, 보증 지원

○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

- 영화제작 보증 금고 도입
- 문화 콘텐츠의 공정 유통구조 정착 지원
-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
-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서비스 근절 전담 기구 인력확충 등 기능 강화

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.

○ 신남방 ·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 추진

- 각국 문화를 매개로 하는 문화정상회의 개최
- 한류 페스티벌 · K-콘텐츠 마켓 추진
- 국제 문화교류, 문화 개발원조 사업 활성화

○ 국가 문화 브랜드 확산 프로그램 강화

- 해외 문화홍보 기관 재구조화를 통한 한류 컨트롤타워 구축
- 한류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확산을 위한 외국인 대상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추진
- 해외 한글교육기관 추가 설치 및 지원 확대
- 세계인의 한국 문화유산과 K-컬처 체험을 위한 '코리아콘텐츠 메타버스' 플랫폼 구축
- 전통예술, 문화유산, 국어자산 등 지속적인 한국 문화의 국제적 확산

○ 문화재 분야 남북 · 국제 소통 및 교류 확대

- 개발도상국 문화유산 공동조사 확대
- K-헤리티지 홍보강화, 역사외곽에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하여 주변국 대응 활동
- 북한에 문화재 인프라 · 보존기술 제공과 협력, 남북 문화유산 공동 조사 및 연구, 문화재 정비 추진

○ 지역 ·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정책

- 고도 이외 지역 문화유산 균형 개발 · 발전 도모
- 국내 지역별 문화유산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회균등 부여
- 발굴 · 개발 지역의 시민 모니터링 및 참여 확대
- 문화재 유지 · 보수의 선진 시스템 관리 확대
- 다양한 문화재 콘텐츠 개발로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

○ '한글 빅데이터 사업'으로 말뚝치 사업의 확대 개편

- 전 세계인들의 가상세계 한글학습 · 체험 프로그램, '한글 메타버스' 운영 추진

○ 종교간 평화 상생 추진 및 종교 문화재 보호 강화

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

- 체육인 고용보험 도입, 전문체육인 재교육사업 등을 통한 고용지원 강화
- '체육인공제회' 설립 · 지원을 통한 체육인 복지서비스 강화
- 여성친화 스포츠 프로그램, 인프라 확충
-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및 공공기관, 기업 운동부 창단 지원 확대
-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지도자 등 일자리 창출
- 어르신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
- 다양한 종목을 체육진흥투표권 편입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확충
- 체육분야 예산 증액 적극 추진

○ 스포츠행정 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

- 전문성 · 효율성 강화와 정책의 조정 · 통합기능 강화

○ 스포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체육계의 폐단 근절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

○ 스포츠 빅데이터 구축 · 공유 ·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

- 스포츠 산업 기술육성을 위한 스포츠 빅데이터 구축 및 보상유통체계 마련
- 스포츠 산업 고용창출을 위한 스포츠 ICT 전문인력 양성

○ 국민 건강 스포츠 인프라 확대

- 15분 거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로 접근성 강화
- 파크골프장 확충
- 대중골프장 회원제식 운영 금지, 일방적 요금인상 억제
- ICT기반 스마트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비대면 스포츠활동 지원, 우리 동네 VR · AR 스포츠체험관 확충 및 신규 프로그램 제공

- 공공 · 학교 · 민간체육시설 연계를 통한 체육시설 활용 극대화
- 종목별 생활체육 지도자 체계적 양성 및 의무배치 추진

○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

- 초등학생 체육수업 확대
- 학교 운동부 지도자 확대 및 처우 개선 추진
-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강화 및 스포츠 강사 확대
-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

○ '스포츠 참여포인트' 제도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

- 스포츠 참여이력 확인 체계 구축과 포인트 제도로 국민건강 증진

○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종목별 스포츠 클럽 육성

- 지방체육회 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
- 지역중심의 스포츠 종목 육성과 지역 스포츠시설 등을 활용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
- 지역특화 비인기스포츠종목 동호회 육성 지원

○ e스포츠활성화 지원

- 학교중심 e스포츠 영재육성 시스템 구축
- 국군체육부대 내 e스포츠 선수단 창설
- 확률형 아이템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 권익 보장

한국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.

○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관광 권리 보장

-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
-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지방정부 파트너십 참여 확대,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까지 확대
- 정부 · 지자체 매칭의 여행이용권 제공 등 취약계층 휴가지원 확대

○ 관광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

- 관광산업 기반의 청년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
- 비대면 온라인시대에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(OTA) 대응 가능한 대표기업 육성
- 의료관광시장, K-culture 시장 등 고부가가치 관광시장 특화 전략 실행
- 글로벌 한류 콘텐츠 활용을 통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

○ 명상치유관광, 자연자원 활용 등 건강 · 치유 관광상품 개발 지원

○ 지역 특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

- 지역 문화자산 활용한 지역콘텐츠 발굴,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
- 야간관광 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(골목, 마을)경제 회복
-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 · 지원

○ 자연친화적, 탄소저감형 관광 프로그램 지원 제도 도입

- 탄소저감실천 관광상품 개발 등 그린 관광 서비스 인증제 도입 검토
- 걷기, 자전거, 무동력 바이크 등을 연계한 '국민그린관광바우처' 추진 검토

○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관광 확대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

- VR AR MR 등 활용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
- 블록체인 기반 캐릭터, 그림, 사진 등 디지털 관광기념품 발굴

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
○ PP의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 콘텐츠시장 활성화

-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의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 콘텐츠시장 활성화
- 장르별 채널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채널 평가 기준 마련
- 중소PP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先계약-後공급 제도 도입 추진

○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유통과 수출 지원
-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국내 · 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

품격있는 콘텐츠 제작 · 공급을 위한
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○ 방송사업자와 제작자(사)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

-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과 불합리한 특약사항 및 권리합의서 작성 금지 법제화
- 프로그램 창작 및 제작기여도에 따른 제작사의 수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

○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

- 중소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원 확대
-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외주 · 독립제작사 지원 강화
- 콘텐츠의 창작 기획 및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
- 방송법상 금지행위 중 불공정 거래행위 보호 대상에 제작사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

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
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

- 전문적 제작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인 아닌 비정형의 다양한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
-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창작자 양성
-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전문강사 배치 및 실습을 위한 시설(스튜디오) 및 장비 구축 지원

○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

-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들을 위한 메이크 스페이스(Maker Space)형 제작 공간 마련 지원
-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비 지원 확대 추진
- 청년 창업의 거점이 되는 지역별 미디어 콤플렉스 확대 구축 지원
-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 · 공급을 위한 MCN(Multi Channel Networks) 지원
-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, MCN의 제작 활성화

○ 1인 미디어 및 MCN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 방안 마련

- 1인 미디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
- 부실한 MCN에 의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

유료방송시장의 상생 환경과 공정경쟁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.

○ 건전한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시장 활성화 지원

- 콘텐츠 제공 및 채널편성 변경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마련
- 유료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 PP와 일반PP와의 차별적 거래 개선
- 방송의 공적 기능 훼손 및 방송상품의 통신상품 부상품화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회계 구분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규정 마련

○ 유료방송의 불공정경쟁 개선

-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유무선 통신상품과 방송상품의 결합판매 제한
- 방송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대해 승인제, 그 외 사업자는 신고제로 전환

○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결과를 재허가 심사 시 반영

지역 · 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○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

- 지역과 중소방송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폭 확대 추진
- 지역 · 중소방송사 지원 전용기금 설치 추진
- 지역 · 중소방송사의 자체 제작 비율 대비 방송통신발전기금 추가 지원

○ 정부광고의 지역 · 중소방송사 지원 확대

-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에 한하여 결합판매 의무화
-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 중 일정 비율(할당량)의 지역 · 중소방송사 우선 배정 및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액 추진
- 정부광고 중 지역 · 중소방송사의 협찬부분에 한하여 수수료 우선 면제 추진

○ 결합판매 방송사 및 광고주에 대한 혜택 부여

- 지상파방송 및 종편PP가 자율적으로 지역 · 중소방송사와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 재허가 · 재승인 심사 시 인센티브 부여
- 종교방송에 기부하는 개인, 법인 및 지역 · 중소방송사에 광고를 하거나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하는 광고주에 대해 세제지원 추진

○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

- 지역방송사의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우선 지원
- 유료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역채널 활성화
- 지역 문화 교류 확대 및 지역 시청자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지역-미디어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

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(DVS) 수신기 보급 확대
- 자막방송, 수어방송,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
-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지원
-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 역량 강화

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재정비
 - 지상파 방송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정비
 - 장르별 방송프로그램 협찬 규제 개선
 -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등 방송광고 경쟁력 확대 방안 마련
-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
 - 미디어랩의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 허용
 - 정부광고의 독점 대행 및 정부 협찬 강제 대행 개선
 - 지상파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개선안 마련
 -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 연계편성에 대한 협찬고지제도 개선
 -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방송광고 규제 강화
- OTT 서비스에 등가하는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

선도형 경제 구축

- 06 미래 혁신 성장동력 확보
- 07 지속가능 기후위기 대응
- 08 앞서가는 디지털 전환
- 09 일자리창출·혁신 창조 인재양성



06

미래 혁신
성장동력 확보

미래 혁신 성장동력 확보

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
중소기업인이 존경받는
중소기업 중심국가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

-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기한 연장 및 가입기간 확대
- 중소기업 근로자-사업주간 성과공유제 도입 장려 등

○ 특성화고, 계약학과(대학)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력 역량 보완

- 대학과 협업하여 협·단체 중심의 계약학과 운영 다양화 추진
- 중소기업 특성화고 확대 및 국립공고를 통한 정예 기술인력 양성 확대

○ AI·반도체설계·SW 등 전문분야 중소기업 인력 양성 적극 추진

- 교육부, 과기부,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, AI·반도체설계·SW 등 전문분야 인력 양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

○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

- 핵심기술 보유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생산현장 매칭

○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

- 명문장수 유공기업을 발굴, 예우하여 기업인의 사회공헌 인식제고
- 은퇴한 기업인의 사회봉사, 국가발전 기회 제공 확대

○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방안 마련

- 사전 증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·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 기업상속 공제제도 사전·사후 요건 개선

○ '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'으로 성장사다리 보강 및 확대

-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및 금융·조세·규제개선 등 중견기업 성장 특화 지원정책 마련

디지털화, ESG 등 변화하는
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
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.

○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

- 사회적 대타협 원칙하에 정부, 기업, 학계, 노동계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채널 구축 · 운영

○ 중소기업 소분야 탄소중립 등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 확대

-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해 「준비→진단→이행」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

○ 탄소제로 팩토리, 안전한 휴먼 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2.0 추진

- KAMP 기능을 고도화하여 마이제조데이터 확산
- 기존 스마트공장(3단계)을 선진형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

○ 금형 · 열처리 · 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

- 공정자동화 · 지능화 등 스마트화 지원 현장인력 부족 애로 해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지원

○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및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

- 공항, 항만 등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, 주요 수출국 현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 · 운영 검토

○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벤처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

- 특정기업 쓸림방지, 신산업 조달 촉진, 제값 받는 중소기업 제품 등 수혜자인 중소기업 중심 공공조달 제도 개편

○ K-팝, K-푸드 등 K-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

- 다양한 온·오프라인 글로벌 유통채널에 K-브랜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참여 확대 프로그램 마련

청년과 선배 스타트업이 함께
성장하는 세계일류
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

- 기금은 선배스타트업(40%)·정부(50%)·지자체(10%)가 공동 조성하되,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발굴 · 선정 지원

○ 청년 신산업 위주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막

- 연차별 기술창업기업수 확대 : (22)23만개 → (27)30만개
- 군장병의 창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창업사관학교 신설
- 팀스프로그램을 지방 스타트업 중심으로 2배이상 확대(400→800개)

○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 · 기술 플랫폼 구축

-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혁신지원기관, 민간 및 정부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딩 조성
- 지역혁신기업 연결, 혁신기술 투자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부(지방정부) 민간 공동 지역별 기술 플랫폼 구축

○ 데카론 기업 육성을 위한 K-비전펀드 조성

-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론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 조성
- 벤처투자 수의 확대를 넘어, 규모의 증대, 투자금액 대형화 유도

○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10조원 달성

- 5년간 모태펀드 신규예산 2배 확대(1조원 → 2조원)
- 벤처펀드 출자시 세제지원 확대 등 민간의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
-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으로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

벤처기업이 견고하게 성장 할 수 있는
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Top3
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.

○ M&A 세제지원, 펀드 조성 및 보증 등 M&A 활성화 적극 지원

- 기술혁신형 M&A시 기술가치산정기준 상향 및 세액공제율 확대
-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혜택 재도입 및 대상·범위 확대

○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

- 규제자유특구 실증 이후, 사업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본격화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·창업기업 100개 육성

○ 진정한 혁신의 실험장 구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시즌2 추진

- 실증특례·임시허가 적용기간을 현재 2+2년에서 3+2년으로 확대
- 지자체·지역공공기관·지역상공회의소 등이 공동 출자하여 특구 내 혁신중소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 특화형 모펀드 조성
- 수도권 기업의 규제자유특구 이전 시 한시적(최장 5년)으로 최저한세 미적용

○ 기업 규제애로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역으로 확대, 운영

- 조례 등 지자체 규제까지 세심히 관찰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외 광역지자체 단위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확대하여 기업규제 애로 해소 강화

○ 창업에만 전념토록 준비-실행-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 부담 완화

-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창업분야 고교학점제 운영
- 청년창업가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

다양한 실패경험도 자산이 되는
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실패를 자산화하여 재창업을 성공하는 재도전·혁신캠퍼스 건립

-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 등 축적된 역량 재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
-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비즈니스 모델 보급

○ 실패를 반면교사 할 수 있는 실패 분석 시 플랫폼 구축

- 교육부, 중기부, 법원(회생법원) 등 공동 참여, 실패사례 제공·분석
- 학생, 시민 및 기업 등 전 국민에게 무료 오픈하여 활용 제고

○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, 민관협력형 재창업기업 스케일업 촉진

-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유망 재창업기업 육성 확대
- 재도약펀드 조성을 확대하여 재도전의 활로 회복

○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

- 재도전 교육·멘토링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재도전 중앙센터 설치

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

- 반도체, 자동차, 조선,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
- 원천기술 확보,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

○ 혁신성장 ·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 성장동력 육성 추진

- 모빌리티, 이차전지, 바이오헬스, 지능형 서비스로봇, 그린에너지, 우주항공 등 미래 지역산업 발굴 육성
- 신산업 발굴 ·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
-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원천기술 R&D, 인력양성, 규제완화 등 추진

○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- 지역산업 생태계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글로벌 공급망(GVC) 첨단산업 허브로 구축
- BG3 산업(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)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강화

○ 5대 소부장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으로 지역성장 활력 제고

- 5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·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
* 반도체(경기) · 이차전지(충북) · 디스플레이(충남) · 탄소소재(전북) · 정밀기계(경남)
-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R&D 및 핵심장비 국산화 지원
- 글로벌 Top 소부장기업 육성을 위해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확대

○ 신산업 발굴 ·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

- 후방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, 창업활성화 지원
- 신기술 · 신제품의 사업화 및 시장창출 지원 확대

○ 탄소중립 · 디지털전환 기업의 선제적 · 자발적 사업재편 활성화

- 디지털전환 · 탄소중립에 선제적 대응, 이업종간 융합 등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 마련
- 사업재편 펀드 및 전용 R&D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

○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(IP) 경쟁력 강화

- 국가 R&D와 표준 연계 강화로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체계 강화
- 스타트업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및 우선심사 강화
- 국내외 지재산 침해 ·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
- 한국형 특허박스(Patent Box) 도입으로 중소 ·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

수출 1조 달러 시대, 글로벌 5대 강국(G5)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○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추진

-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략, 해외지사화사업 확대, 전문무역상사 역량 강화, 대·중소중견 동반진출 등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 플랫폼 혁신

○ 수출시장·수출품목 다변화 지속 추진과 수출효자 신산업의 적극 발굴

○ 신성장·고부가 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

○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무역을 제조업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도 동시 추진

중견기업을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○ 지역투자자와 고용을 이끄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발굴

- 중소기업과의 공동R&D,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미래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기업으로 육성

○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

- 중견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(중소→중견→글로벌전문기업)으로 스케일업 지속 지원
- 대규모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
- 중견기업 월드클래스+, 지역대표 중견기업 등 맞춤형 중견기업 지원 확대

○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소부장 중견기업 육성

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.

○ 바이오헬스 산업정책 패러다임 대전환

-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
-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 지원
- 신의료기술 평가방식의 합리적 개선

○ 보건안보 국가 경쟁력 강화

-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 신속 확보
-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통한 생산역량 강화

○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

- 건강정보를 통합 · 조회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 구축사업(공공 주도 마이헬스웨이)

○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

- R&D 세제지원 확대, 혁신 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
- 바이오헬스분야 R&D 예산 및 인재양성투자 대폭 확대

지역 R&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.

-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&D 투자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'지역자율 R&D 예산' 확보
-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
-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
- 지역별 특성에 맞춤형 민 · 관 · 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구축
- 바이오-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,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 추진
- 지역의 연구산업 기업 육성으로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
-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대형핵심연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

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.

- 감염병, 기후위기, 에너지전환 등 인류가 직면 중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험 R&D 과제 선정과 해법 제시 중심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
-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 사이버 범죄, 보이스 피싱 등 생활 속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
-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상에서 유용한 국민체 감형 과학기술 연구에 주력
- 코로나 바이러스, 조류독감, 구제역 등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&D 투자 확대

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.

-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
 -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연구개발 투자 확대
-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&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&D 체계로 대전환
- 정부와 기업이 과제 기획을 포함한 R&D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R&D 대폭 확대
 - 단순한 기술개발 위주의 R&D 사업이 아니라 R&D, 인력양성, 실증, 사업화, 국제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
-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을 지원 확대
 - 공공조달과 해외협력사업 확대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
- 우리기업의 기술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탄탄한 기술 역량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
- 신기술개발에 의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조정 기능을 정립하고 입법체계를 선제적 재편
-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'선허용-후규제'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

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.

- 국가차원의 기술확보를 위해 담대한 도전(Grand Challenge) 추진
-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기술주권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립
 - 양자기술, 인공지능 등의 10대 대통령 빅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
 - 핵심소부장(소재 · 부품 · 장비)의 독자적인 연구와 생산능력 확대 지원
-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과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 ·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
- 공공 · 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'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'를 5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추진
- 임무지향형 프로그램으로 '국가전략프로그램'을 추진
 -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
 - 관련 사업 전담 연구개발 및 혁신조직을 신설하고, 범부처 역할조정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
-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, 필요할 경우 한국형 K-ARPA(고등혁신연구개발원)를 설립하여 추진
- SMR(소형모듈원자로),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

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.

-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개발 지원
- 발사체, 발사 인프라(발사대, 해상 스페이스포트 등), 우주정거장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
-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
 -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
-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(KPS) 조기 실현
- 민 · 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, 첨단 인공 위성 관련 민간산업 육성
- 우주자원 확보, 우주영토 확장(SRU), 우주 에너지(우주태양광) 등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 추진

농산업을 첨단기술이 함께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.

○ 청년 미래 혁신인재 5만명을 육성하여 농업·농촌의 전환적 성장 주도

- 농업분야의 각종 교육과정에 '혁신인재 아카데미'를 접목하여 혁신인력 양성체계 구축

○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

- 국내 부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IT, BT, NT와 융복합 연구 및 마이크로바이옴, 대체식품·메디푸드 등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
- 디지털 육종기술 등 첨단기술 활용 종자산업 발전기반 및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

○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스마트팜·스마트빌리지 확대

-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, 무인·자동화 농작업 기반과 체험·실습체계 구축, 노지재배·축산의 스마트화 등 농업 SOC와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
- 스마트빌리지, 스마트교육, 스마트관광 등으로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 추진

○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맞춤형특수식품, 기능성식품, 간편식품, 친환경로컬식품, 수출식품 등 육성
- R&D 확대, 스마트팩토리 지원, 식품빅데이터 구축,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
-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및 6차산업 연계 푸드파크 조성, '권역별 식품기업 지원 체계' 구축
- 농식품 가공업체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공급 지원 확대

○ 미래 농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, 혁신기업, 지역중심 전문기업 등 육성

- 농업의 디지털 전환, 그린바이오·식품산업 확산이 새로운 성장동력화,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주체 육성

친환경선박 전환 및 상생경제 시스템으로 해운재건을 완성하겠습니다.

○ 금융지원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발주 및 컨테이너박스 확보 지원

- 수출입 물류망 안정을 위한 중소선사 특례지원과 국적선사 컨테이너 선박량 확대 및 동남아, 유럽 등 해외 항만 터미널 확보 지원

○ 친환경선박 펀드,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등 상선 친환경선박 지원 추진

○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한 선박금융시장 육성 추진

○ 전 물류구간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

○ 우선선화주 인증 제도를 부정기 선화주까지 확대 및 공제혜택 강화 추진

○ 자율운항선박사업 클러스터 구축

○ 新해양산업 육성 및 기술 확보 추진

- 新해양산업 육성 및 기술 확보 추진
- 자율운항선박사업 클러스터 구축, 디지털 종합해상교통관리체계 구축

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고 내실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, 신성장동력 육성 및 탄소배출 저감 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
- 상장기업의 ESG 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자정보 제공, 객관적 ESG 평가체계 구축 및 무늬만 ESG 규율 강화 등 ESG 공시, 측정 및 평가 인프라 제고
-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활동 강화 및 ESG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등 ESG 생태계 구축 지원

저성장 극복을 위해 규제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
-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,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
-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,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
-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주도방식과 민간주도 방식의 상호보완 추진

혁신성장을 지원을 위해 공공의 혁신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구매 방식을 수동적 방식에서 제품 개발 제안 등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하고
수의계약 확대
- 우수 R&D 제품 및 4차 산업 혁명 관련 제품 공공구매 우선 지원 통해
혁신구매 목표를 5%까지 확대
-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제품심사, 홍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

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습니다.

- 현금 없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디지털 화폐 도입
-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예금계좌 도입 추진

지속가능 기후위기 대응



지속가능 기후위기 대응

석탄발전을 조기 대체하고,
무공해차 전환으로
지방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석탄발전 조기 대체 추진

- 204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 전면 중단 추진
- 효율이 낮은 노후 발전소부터 신재생 또는 LNG 발전소로 대체
-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
- 발전산업 전환의 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'에너지전환지원법' 제정 추진
- 조기 전환 등에 따른 사업자 보상금, 석탄발전 주변 지역 지원대책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연계 추진

○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무공해차 전환 추진

-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중단 추진
-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체계화
- 공공부문 조기 전환, 택시·버스 등 대중교통 단계별 전환 추진
- 주요 도로·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확대 설치 등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
- 신속한 전환을 위한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 현실화
- 내연기관차의 인구밀집 지역 운행 제한 시범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전환 촉진
-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'무공해차 의무판매제'로 개편
-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·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 확대, 재교육·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강화

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

○ 탄소중립 그린도시 100개 조성 사업 추진

- 향후 5년간 전국 100개소(근린생활권)를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'탄소중립 그린도시' 조성사업 추진
- 선정된 100개소는 실질적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형 공간모델로서 우수사례를 발굴 · 확산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

○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원 체계 구축

-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
- 광역 · 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지원 및 네트워크화로 효과성 증대

기후변화로 인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겠습니다.

○ 홍수취약 주요 지방하천의 관리 강화 및 취약구간 정비 추진

- 주요 지방하천 중 홍수 대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사전 예방
- 기존 하천 직강화 위주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질 · 수생태 환경을 고려한 생태 소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전환

○ 도시형 통합물관리 도입과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

- 홍수 예방, 수질 · 생태, 문화 · 경관, 하천-도시 연계 등을 결합한 도시형 통합물관리 개념 도입
- 도시하천의 하천-하수도-저류시설 연계, 배수시설 강화 등 침수예방사업 추진
- 도시하천을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구성, 국민의 하천 향유권리 확대

○ 스마트 홍수관리 체계 도입

- 빅데이터,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댐, 저수지 등 수자원시설의 안전성 강화
- 인공지능(AI) 기반 홍수예보, 디지털 트윈 등 댐-하천 연계 스마트 홍수관리 플랫폼 구축

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멈춤 없는
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.

○ (수거) '공공책임과 시민중심'의 수거 체계로 개선

- 재활용폐기물 공공책임 수거 전환 지원
- 시민중심 공동체(공동주택, 업체, 지방정부 3자) 협정 제도화
- 공공비축 창고 등 재활용 안정 기반시설 확충

○ (처리)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

-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, 재활용품 품질 등급 관리
-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(부담금 대체 요건 강화)
-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하는 직매립 금지 이행 지원체계 구축
- 환경친화형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(주민 지원 인센티브 강화)
- 폐자원 인센티브 등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계획 수립

○ (혁신) 스마트하고 쾌적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

- IoT 기반 센서, GPS, 빅데이터 등 스마트 폐기물 관리 관련 융복합 기술 지원 강화
- 단독주택 등 수거가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설치 지원
- 남은 식재료 및 음식물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스타트업 지원

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
통합 기상재난예보를 실현하겠습니다.

○ 기상·기후·환경·재난 정보의 통합 관리

- '예보-대응-모니터링'의 순 단계에 걸친 대응으로 국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
- SI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기상청-산림청, 기상청-농진청·해수부 간의 정보 융합
-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변동성 증가에 신속 대응 체계 마련
- 산사태 사전 경보를 1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대폭 개선

탄소세제 개편과 배출관리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반을 닦겠습니다.

○ 탄소세 도입 및 탄소세제 개편 추진

- 국제 동향과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탄소세 도입 단계별 추진
- 국회와 경제 · 산업계, 학계 · 전문가, 시민사회 등과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계획 수립
-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자원 조성 및 에너지복지 지원(기본소득 연계)으로 활용
- 기존 교통환경에너지세,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 세제와의 통합 등 탄소세제 전면 개편 검토

○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(ETS) 혁신

- 감축경로에 연계된 배출총량 할당으로 거래제의 순기능 강화
- 발전업종의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
- 연료와 상관없이 전환부문에 동일한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(통합BM) 적용 추진
-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, 배출량, 연차별 감축률 등 투명한 정보 공개
-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전환제도 개선
- 제3자 참여 확대와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 도입으로 거래시장 활성화 유도

○ 탄소중립-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

- 연기금 등 공공분야 자원의 국내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투자 전환
- 탈탄소 기술 개발 및 관련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 추진

국립공원, 습지,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습니다.

○ 유휴공간, 습지, 국립공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탄소흡수원 조성

- 육상 · 해양의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 조성 · 확대 추진

○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기반 정비

- 탄소흡수원 정보관리 및 통계 작성체계 개선, 탄소흡수원 증진 정책사업 발굴 등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
- 유형별(습지, 초지 등) 생태계 건강성과 탄소흡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 기능평가 도입을 통해 이행평가 · 정책 환류체계 구축

○ 비점오염저감과 탄소중립을 접목한 탄소흡수형 비점오염 관리 대책 추진

-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농촌지역 등 전국에 산재한 휴경농지 및 유휴부지에 식생형 비점저감시설 설치
-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 추진

플라스틱 제로 사회의 시작을 열겠습니다.

○ 플라스틱 원천 감량 추진

-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원칙 수립
- 경제성과 식품안전 등을 보완한 다회용기 스타트업 지원, 그린배송 인프라 구축
- 기업의 폐기물부담금 현실화로 일회용 포장재 및 플라스틱 사용 저감 유도
- 공공부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중단 추진

○ 플라스틱 재사용 · 재활용 확대 추진

- 세제 등 다회용기 가능 물품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재충전 설비 설치 및 리필스테이션과 같은 포장재 없는 상점 확대
-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 시 생산자책임재활용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
- 녹색구매제도를 활용한 공공부문 재생원료 · 재활용제품 의무 구매율 도입

○ 자원이용성 향상

- 용도 · 품목별로 재질 · 구조를 표준화하고, 일회용 포장재 재질 단일화 추진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 강화
- 친환경디자인규정(ECO Design Directive) 도입과 무라벨 제품의 생산 확대 지원
-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'고쳐 쓸 권리(Right to repair)' 보장 확대

○ 플라스틱 자원화 시장 활성화

- 식물 등 재생가능 자원으로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'화이트바이오' 산업 육성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강화
- 플라스틱 대체 상품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법 · 제도 개선
- 플라스틱 자원화 관련 기술 R&D 투자 확대와 기업 상생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 유도

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○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추진

- 개발영향을 받는 자연환경에 대해 공공기관 주도로 신뢰성 있는 조사 진행 및 조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

○ 환경영향평가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

-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디지털 트윈 등 4차산업 기술 등을 통해 과학적 예측 · 평가

○ 환경영향평가 수 과정 공개로 투명성 향상

-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주민 의견수렴 등 참여 기회 확대

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.

○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

- 산업계의 전환비용 지원으로 부담 완화, 취약산업 종사자 지원 확대 등 기반 마련

○ 전기차·수소차,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

- 자동차부품기업 사업재편 및 미래차 인력 양성 지원
-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용 R&D 및 투자펀드 조성 추진

○ 탄소배출 업종(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등)의 탄소중립 전환·제조공정 효율화 추진

- 수소환원제철, 화이트바이오 등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R&D 투자 지원
- 탄소국경조정(CBAM) 등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

○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촉진

- 재제조 산업 확대, 사용후 배터리·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제 구축 등

○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·신기술 적극 발굴 지원

- 그린에너지산업(재생에너지, 수소), 저탄소 신산업(바이오, 모빌리티), 기후산업(탄소포집·활용·저장, 순환경제) 등

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으로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에너지 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

-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및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
- 지역에너지센터 확대로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
- 지역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

○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기 구축

-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, 수소클러스터 구축
- 수소융합 슈퍼스테이션 기반 확대, 수소 가스터빈 기술개발 등 지원

○ 풍력발전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한국형 원스톱샵 도입

- 원스톱샵을 통해 계획 입지(국가 주도 입지발굴, 지자체 주도의 주민수용성 확보), 인허가 일괄 수행·처리

○ 지역생산·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

- 전력 수요지 인근의 발전설비 및 도심형 분산전원 확대
- 분산형에너지 시장참여 유도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
-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○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

- 주민참여·이익공유형 프로젝트 확대로 주민의 적극적 사업 참여 환경 조성
- 에너지협동조합 등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공급망 지원 확대
-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(에너지 바우처 확대,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)

에너지고속도로 기반 구축으로 지역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.

○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속 확충

-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(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.2%)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설비 확대
-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, 재생에너지 우선구매제도,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 등 시장제도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수급 효율성 제고
-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

○ 지능형 ·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(에너지고속도로) 기반 구축

- 공공 투자와 민간 협력을 통해 지능형 ·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마련
- 전력 ICT(지능형 계량기(AMI), 인공지능(AI), 정보통신기술(CT) 등)을 통한 전국단위의 전력망 ·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
-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(태양광, ESS, V2G 등)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한국형 가상발전소(VPP)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

○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 반대

- 원전의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금지

○ 재생에너지 적기 계통연계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

-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및 송변전설비 적기 계통 보강
-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유연성 자원(에너지저장장치, DR) 확보
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

○ 탄소중립 · 에너지 핵심기술 R&D 강화

- 페로브스카이트 등 초고효율 태양전지, 전고체 배터리, 대형 · 부유식 해상풍력, 차세대 가스터빈, CCUS(탄소포집 · 저장 · 사용) 등 탄소중립 · 에너지기술 R&D 지원 확대

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.

○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%를 목표로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

-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고,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형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
-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자원 기반 경종 · 축산 순환농업과 동물복지 · 생태 축산 활성화
- 가축분뇨에너지화 확대 등 가축분 퇴 · 액비 중심의 통합 양분 공공관리체계 구축, 축산기업의 환경 · 사회적 책임 강화

○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및 사료산업의 위상 강화

- 조사료 · 사료원료의 안정적 생산 및 확보, 저메탄 · 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, 다양한 밀원수 확대, 주요 가축의 육종 · 개량 강화, 산업동물 수의인력 육성

○ 농업인 · 농촌주민 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여 농산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화

- 마을회관, 주택지붕, 축사지붕, 도로, 유희부지 등에 햇빛농사 및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추진
- 가축분뇨, 목재, 어패류, 음식물, 에너지 작물 등 바이오매스 재생 에너지화
-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 · 바람 · 바이오연금으로 지급

○ 이상기후 대응 재해비상대책 수립, 재해보험 대폭 강화

- 대상품목 · 보상범위 및 보상을 확대, 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등
- 기후변화 적응 대체작목 개발과 병해충 · 질병 등 품목별 · 축종별 대응강화

정책금융기관 지원 기업의 ESG 평가를
강화하여 지속가능한
선순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.

- 정책금융기관 투자 기업의 ESG 평가 지침 마련
-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 시 지원 대상 기업의 ESG 수행 평가 강화



앞서가는 디지털 전환



앞서가는 디지털 전환

인공지능(AI) 활성화로
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.

○ AI+X를 넘어 X+AI로 융합산업 활성화

- 대규모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X+AI 신규 유망 서비스 발굴 및 지원 강화
- AI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· 벤처기업 활성화
-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· 활용
- 특화 산업형 AI 지역집적단지 조성 확대와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AI 응용기술 고도화 지원

○ 인공지능 · 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인 'AI 반도체' 산업 육성

-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유망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주기별 맞춤형 지원
- AI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

○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

- 공공데이터 및 민 · 관이 함께 투자한 AI학습용 데이터를 전면 개방 추진
-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통합데이터포털 설치 · 활용 추진
- 데이터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치평가, 품질인증제 도입
-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 · 민간 데이터 통합 활용 추진
- 의료,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· 활용을 위한 전면적 규제 혁신
-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'마이데이터 제도'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

○ AIoT ·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

- AI와 IoT가 결합한 AIoT기반 新시장 · 수요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 분야 발굴 · 육성
- AI와 클라우드가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 및 서비스 개발 지원
-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촉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

○ AI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R&D 지원 확대

-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및 전문 연구기관 확대 조성 및 일반대학원 AI융복합 학위과정 증설 추진
- 산·학·연 연계로 AI 융합을 위한 AI·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현업 산업전문인력의 AI 역량 강화 지원
- AI 기술분야 R&D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확대 추진
- 정부출연기관의 AI분야 연구원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'AI 스피노프'제도 활성화

○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·제도적 장치 마련

X+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습니다.

○ X+디지털 기술 융합 확산

-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 기술 개발 및 지원 강화
- 제조, 농식품, 의료, 비즈니스 등 특화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
- 디지털 기술 전문인력의 전문기업, 연구소기업 창업 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

○ SW 혁신기술 활용 확산

-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한 거점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
- 지역 및 중소 SW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투·융자 확대 추진
- 공개SW 기반 혁신 융합기술 활용 확산 지원
- 국내 SW·AI 기술 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SW·AI 융합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합작·연계사업 지원 강화

○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

- SW 수요 예보, 일방적 과업 변경금지 의무화, 합리적인 SW 사업 대가 산정 등 공공SW 발주제도 혁신
- 공공SW의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및 국내·외 기업 역차별 개선
- 민간·SW개발계약 시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및 정부·공공기관의 상용SW에 대한 개발자의 저작권 보유 개선
- IT·SW 융합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강화

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.

○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

-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R&D 투자 및 6G 국제표준 주도로 글로벌 장비 · 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 마련
- 6G 네트워크 실현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 적극 추진

○ 5G 네트워크시대 필수 요소기술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(MEC)의 안전한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

○ 디지털 경제의 보안기술 인프라인 블록체인(Block Chain) 기술에 대한 R&D 투자 가속화

○ 미래 정보통신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기술(Quantum ICT)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&D 지원 강화

○ 3D프린팅 기술 개발 고도화와 사업화 확산을 위한 투자 지원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

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新융합산업시대를 열겠습니다.

○ 가상융합경제 활성화로 신융합산업 선도

- 7대 핵심산업 분야(게임, 엔터테인먼트, 제조, 교육, 의료, 국방, 유통 등)의 '가상융합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' 강력 추진
- XR 기술개발 · 콘텐츠 · 디바이스의 3종 1세트 병행 육성 전략 추진
- 메타버스를 공공인프라, 산업,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혁신적 플랫폼으로 육성
- 가상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 · 연 · 관 협력체계 구축
-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 · 제도적 장치 마련

○ 가상융합 콘텐츠 기업 육성 · 지원

- 실감콘텐츠 관련 유망 1인기업, 스타트업 대상 인큐베이터(Biz Incubator) 지원
- 가상융합서비스 스타트업, 창업기업, 중소 · 벤처기업의 제작 · 테스트 · 실증 지원
- 메타버스 기반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클라우드서비스 및 고용지원금 우선 지원으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
- 고품질 실감 콘텐츠 분야의 제작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 고도화 및 고가의 공동 활용 인프라 확충
- 대용량의 실시간 3D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그래픽 처리 성능 고도화 및 디스플레이 기술 지원

○ 주요 권역별 '메타버스 허브' 구축 및 '메타버스 아카데미' 운영

- 메타버스 실증테스트 환경구축, 기술지원, 신서비스 발굴 · 실증,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주요 권역별 '메타버스 허브' 확대 구축
- 메타버스 허브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, 산 · 학 · 연과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특화 메타버스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
- '메타버스 아카데미'를 운영하여,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도할 창의적인 지역 특화 전문인력 육성

○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메타버스 활용 환경 구축

- 메타버스 활용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·제도적 장치 마련
- 메타버스 시스템 해킹·침해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장치 구축 의무화

내실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.

○ 디지털 체험학습 강화

-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흥미유발(게임·메타버스) 수준부터 기본(SW 블록코딩)과정, 전문(알고리즘) 과정까지 체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
- 전국 과학관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한 과학기술+디지털 융합교육 제공
- 대학을 중심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SW, AI 등 디지털 기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 지원

○ 내실있는 SW·AI 학교 교육 구현

- SW·AI(정보과목)교육 필수시간을 주 1회(매년 약 34시간) 수준으로 확대하고, 초등~고등학교까지 연속성있는 교육 제공
- 중·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교과 담당교사 확보로 양질의 전문교육 담보
- 비대면 수업 확산에 대비, 학생 개인 수준 맞춤형 온라인 SW·AI 학습용 플랫폼 활용 확산

○ SW·AI 교육 전문인력 확보

- 초등학교 SW 교육 지원 및 지역의 '디지털 기본역량 센터'에서 SW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(digital tutor) 도입
- 산업 현장의 숙련된 재직자 활용을 통한 SW·AI 교육 전문강사 보강 및 재직자의 교육 활동 허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- SW·AI 분야 경력자와 퇴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 개발자에 대해 최신 기술 재교육 과정 이수 후 전문강사로 활용

○ 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

- SW,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, 취직후 일부(약 70%)를 갚는 '한국식 휴먼캐피탈 제도' 도입

- 기존의 A대학원, 이노베이션아카데미, SW마에스트로, 이노베이션스퀘어 등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 강화
- 지방대학을 거점으로 'SW중심대학'을 두 배 이상 확대
- SW, AI, 사이버보안 등 기업 필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 지원
- 군(軍)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더욱 확대
-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, SW·AI 전문교육 강화로 고급 실무인력 양성

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.

○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한 '디지털 기본역량 센터' 설치 지원

○ 디지털 접근권 보장

-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접근권 보장
- 장애인·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·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
-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스마트 기기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
-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공공시설과 도심 등 다중 이용 공간에 공공와이파이 확충

○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

- 디지털 소외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장·노년층 등)에 대해서는 컴퓨팅 교육을 기본으로 수준 단계별 SW·AI 맞춤형 교육으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
-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SW·AI 교육과정 수강 지원
-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 영역에 디지털역량 교육 포함

○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·제도적 장치 마련

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○ 사이버 안보 강화로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 대비

- 국가안보, 기업거래정보,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핵심 인프라 보호 강화
-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융합 보안, 인프라 보안,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보안 신기술 개발 · 확보
- 민·관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 및 사이버보안 훈련, 대국민 · 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등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확립
- 주요 동맹국과 사이버보안의 전략적 협력, 대응을 위한 '글로벌 사이버위기 대응 협력체계' 구축

○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

○ 첨단기술을 활용한 ID 탈취, 보이스피싱, 스미싱 사기 근절 추진

○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지능형 공격방어 기술 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 강화

비대면 시대 데이터 비용 절감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○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

○ 병사에 대해 요금할인 비율을 20%에서 50%로 인상

○ 국민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5G 중간요금체계 도입

○ eSIM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급제 활성화

○ 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 버스 5G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

○ 5G 백홀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(공항철도 포함) 전반으로 확대

○ Whitespace(=TV 유휴대역) 활용을 통한 Super WiFi 구축으로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

○ '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' 서비스(잔여 데이터의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) 도입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

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.

○ 산업 현장의 DNA(Data · Network · AI) 생태계 조성

- 자동차, 조선, 철강, 섬유, 석유화학, 기계, 유통 · 물류, 뿌리 · 소재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혁신 추진

○ 센서 · 임베디드S/W ·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제조혁신 기반 마련

- 센서 산업 역량 강화 추진, 임베디드 S/W 기반 기술 확보
- 미래 지능형 로봇 기업 육성 및 로봇산업 인프라 강화 등

○ 디지털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도 제고

- 산업의 공정혁신, 제품 · 서비스 개발, 비즈니스 新모델 발굴 등

○ 중소 ·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

-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○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

- 고부가가치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발굴 · 육성

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영환경에 대응토록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디지털 전환 필요 중소기업 대상,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

- 매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모델 전환 지원

○ 안정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 설치

- 디지털 관련 정보 능력 배양, 교육 학습, 참관 실험 등 제공
- 사업전략에 기반 수요기업의 투자 유인과 비즈니스 모델 지원

○ 디지털, 탄소중립 등 전통기업의 미래대응 사업전환 기반 마련

- 사업전환 촉진 대상을 업종별, 규모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금융, 인력 등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

○ 지역별 중소기업 R&D 실증센터 구축 및 공공기관 실증 공간 개방

- 각 지역 규제자유특구(지역전략산업)와 연계하여 실증센터를 전국 광역별로 설치하고 생산기술원 등 공공기관 내 실증공간 활용 플랫폼 구축

○ K-혁신밸리 조성(반도체, 바이오, 미래차, AI, 우주 등 미래기업 육성)

- 지역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 구축된 산업, 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생산, 연구개발, 금융, 세제, 교육 등 융 · 복합 지원

○ 중소기업 전용 R&D 확대 및 투자형 R&D펀드 1조원 조성

- 중소기업 R&D예산을 지속 확대하고, KOSBIR 제도에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출연연 추가

앞서가는 디지털 전환

○ 연구, 생산 및 OEM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(가칭 스마트 엑셀러레이션 플랫폼) 구축

- 최적 생산방식(Lean Production)의 공급망과 중소기업 전국 네트워크 연결 및 연구, 공유생산설비 운영 등 연구기관-정부-기업간 제조협력의 장 마련

앞서가는 디지털 전환

정부 데이터를 국민에게
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.

- 정부의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(Machine Readable) 형태로 공개 추진
- 정부가 공개하는 자원은 민간 클라우드 사용 추진

09

일자리창출 · 혁신 인재양성



01

일자리창출 · 혁신 인재양성

디지털 · 에너지 ·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
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

- 디지털 전환 135조원 투자와 초연결 신산업 등을 통해 혁신일자리 창출
-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녹색일자리 창출
- 돌봄 · 간병 · 보육 및 공공보건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안전망 강화

기업전환, 노동전환, 지역전환을 아우르는
일자리전환 정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유럽연합의 '공정전환계획'에 버금가는 한국형 '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계획' 마련
- 일자리정책을 정합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
- 경제 · 사회정책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자리전환 국가전략 수립

기업, 노동자, 지역을 위한
일자리 지원 제도 ·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고용유지 과세특례, 고용증대세제 감면, 투자 · 상생협력촉진세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일자리세제 기능 강화
- 일자리 분석, 맞춤형 훈련 · 상담, 일자리 이동을 연계하는 일자리전환 플랫폼 구축
- 지역 대학-기업의 맞춤형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한 지역혁신인재 양성

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'100만 혁신미래인재' 양성

- AI대학원 지원사업 확대 및 초광역 권역별로 '4차산업 전문대학원' 신설 추진
- 민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AI 전문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

○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SW, AI, 빅데이터 교육 강화

- 2022 교육과정 개편안에 근거하여 초·중학교 교육과정에 SW, AI 등 컴퓨팅 사고력 교육 등 정보관련 교과 시간 추가 확대
- AI교육 전문센터 구축 및 디지털·AI교육지원단 구성으로 교육지원 강화

○ 디지털 전환 사회를 선도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K-에듀버스 구축

-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

○ 디지털 교육 정책을 위한 1인 1태블릿 기기 확대 보급

-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인 1태블릿 기기 지급,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 후 단계적 확대

개방·융합형으로 직업교육을 개편하고, 효율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

○ 특성화고 지원 확대 및 마이스터고·일반고 전환 추진

- 신산업 중심 학과 개편, 졸업 후 연계대학 진학 일·학습 병행(P-TECH) 도입
- 산업현장의 유능한 인력이 실습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방

○ 현장점검 강화 및 노동인권교육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확보

- 졸업생 포함한 직업계고 취업지원시스템 확대 통해 현장실습 의존형 취업 관행 개선
- 청소년 유해·위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습 폐지

○ (전문)대학 공유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

- 첨단·신산업 분야 공유·협업 활성화
- 전문대 및 기초지자체 연계 지역특화 전문대 육성

지역중심의 고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· 기본적 제도 마련

- 지역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 · 집행 지원
- 지역 일자리 효과적 창출 · 유지,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지원
-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노 · 사 · 정 사회적대화 확대

○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할 지역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추진

- 중앙 · 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부처별 ·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일자리 센터를 통합 · 재편
- 고령자 취업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
- 지역내 고령자 취업정보 포털 및 통합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

○ 청년맞춤형 고용 정책 추진

- 구직포기 청년 니트(NIET) 대상 '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' 맞춤형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
-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를 통한 취업면접 지원
-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
-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%에서 5%로 단계적 상향 추진
-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, 교육기관 구직자의 채용시 신체검사비용 부담 의무화
- 지자체 청년수당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

○ 지역중심의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

- '정의로운 노동전환'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, 사회적 대화를 통한 '정의로운 노동전환 로드맵' 마련

- 중앙 및 지역에 '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센터' 네트워크 구축 및 특별지구 지원 실질화
-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 위한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실질적 지원
- 노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 · 사 주도 훈련 지원 등 노동전환 이행력 담보
- 장기유급휴가훈련과 노동전환지원금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법 제정
-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지원금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전환 지원
- 선제적으로 고용 · 산업위기지역 지정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전환 지원

○ 연금수급기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 고용정책 발굴 및 지원

지방정부의 노동 행정을 제도화해,
노동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지방정부 '노동정책 기본계획' 수립 추진

-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재구성
- 지자체 고용 및 노동관련 조례 제 · 개정 및 정책(방침, 규정, 지침) 수립
-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입각한 평가 및 사무지표 마련

○ 각 지자체에 '독립된' 노동 · 일자리 전담부서 설치

- '시 · 도' 단위에서부터 노동 · 일자리 전담부서 설치

○ 지자체에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노동권의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확대

- 현재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,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권의 지원센터 지원 및 미설치 지자체 도입

○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· 확대 추진

○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확산 및 대상 확대

-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확대
-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및 민간도입기업 인센티브제 도입

○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

-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 등을 지도 · 감독
- 근로감독관을 추가 증원
- 지자체 '산업안전지도관' 신설 및 '지역 맞춤형 산재예방' 지원

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
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.

○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 · 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 일원화 추진

○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 · 지역 · 청년 · 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

○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

-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 선정 확대 및 지원 강화
- 출연연 중심의 박사후 연구자와 신진연구자의 일자리 확보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

○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-출산-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
○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R&D 혁신활동 참여 확대

-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
-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은퇴 후에도 연구과제 책임자로 인정하여 과제 기간 안정적인 연구 활동 보장

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R&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,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
-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
 - 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 기본연구비 보장
 - 출연연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(PBS)를 개혁하고, 이를 위한 출연금 예산 비중 확대
-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
- 공공기관운영법상 연구목적기관에 적용하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 추진

법조인력 양성 방법을 다양화하고, 지역사회 공헌을 높이겠습니다.

- 전일제 · 주간 과정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로스쿨 운영을 다양화하여 문호 확대
 - 로스쿨에 온라인 · 야간 과정을 추가하고, 신규 인가도 추진
 - 온라인 · 야간 로스쿨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
 -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로스쿨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
-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 검토
- 각 로스쿨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법률 사건에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내실화
- 로스쿨의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개선방안 마련

상생하는 공정사회

- 10 국민 눈높이 공정 구현
- 11 누구나 교통·주거권 보장
- 12 힘찬 지방, 든든한 균형발전



10

국민 눈높이 공정 구현



01

국민 눈높이 공정 구현

불공정한 환경에서
힘들어 하는 을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.

- 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확대하고, 이행관리 강화
-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
-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실효성 확보와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확보 능력 강화

대·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
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
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.

○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강화

- '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'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 강화
- 기술보호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5년간 1,000개 육성

○ 통합적인 기술분쟁 조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

-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기술탈취 등에 따른 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·관리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분쟁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

○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「乙」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

- 하도급·수위탁 거래,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
- 납품단기원가연동제 도입 및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공동행위 허용 등 추진

○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'공정 안전망' 구축

-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,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

○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의 확산 프로그램 강화

- 사회적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학생부터 청년 창업가를 중심으로 상생의 가치를 기업가 정신으로 승화하는 교육 확대

○ 자발적 상생 기업 제도화 및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

- 그간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자상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○ 상생협력 우수기업 규제특례 부여로 상생협력 활성화 유도

-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업종·입지에 대한 규제 특례 방안 마련

기업의 윤리·준법·책임 경영을
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, 분야마다 달리 규율되고 있는 징벌배상제도를 통합한 일반법으로의 확대·강화

○ 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 확산 촉진

○ 미국 사례처럼 분식회계 등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수액 일부 포상금 지급 추진

○ 임의규정인 집행임원제(상법 제408조의2) 내실화 추진

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,
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가상자산업을 인정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, 투자자를 보호하는 “가상자산업의 발전 및 투자자보호법”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
-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가상자산 공개(ICO) 및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·공개(STO) 등 혁신적 가상자산 발행 적극 지원
- 창의적 디지털자산 발행, 안전한 거래 및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고,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강화

주식시장의 국내외 투자기반을 튼튼히 하여
자본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.

-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,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장기투자를 유도하고,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하여 폐지
- 공적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비율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도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등 국내투자 활성화 촉진
- 공모주 배정 일반 청약자 배정비율을 25%에서 30%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공모주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마련하고 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
-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및 성장성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 구축

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

○ 온라인 플랫폼 시대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성장 지원

-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
- 온 · 오프라인 상권 분석,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

○ 가맹점 · 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

- 가맹점 · 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- 가맹본부, 대리점 사업자, 대기업 등의 불법 ·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등

○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

-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
-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
- 거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제도 재정립
- 소비자간 거래에 대한 피해 방지 및 구제제도 마련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대상 무분별한 댓글 · 별점 테러 방지

- 플랫폼 서비스 리뷰 · 별점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
-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

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.

○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

- 기업의 ESG 평가지표 상 성별다양성 항목 비중 확대
- 공적 연기금의 ESG(환경 · 사회 · 지배구조) 투자 요소 고려에서 성평등 관점 확대

○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

- 여성 모집 비율 상향

○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

○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

○ 정치영역의 성희롱 ·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

12

국민 눈높이 공정 구현

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

- 구조적 성차별은 우리 모두의 문제,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
-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
 - 성평등 가치를 높이고 차별과 혐오를 넘는 세대, 젠더 공감 역할 강화

13

국민 눈높이 공정 구현

공공기관의 건전성과
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제도 적용 확대를 통해 책임경영 확립, 방만경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
-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구분 평가하여 기관별 맞춤형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
-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 평가 체계 도입

국가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성과 저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여 재정개혁 추진
- 부처간 동일목적 유사사업 조정 및 성과지표 점검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혁

공정한 자동차세를 구현하겠습니다.

-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고가의 저배기량 수입차의 자동차세가 저가의 고배기량 국내차의 자동차세보다 낮은 등 과세형평성 저해
- 보유분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정 : 배기량 → 차량가액 + CO₂ 배출량
 - 저렴한 차는 낮은 세금을, 고가의 차는 높은 세금을 부과
 - CO₂배출량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저감장치에 대한 유인 마련

공무원 · 국가공인자격 시험 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출제위원 보강 및 감사를 통한 출제오류 근절
- 수험생 대상 문제 재평가 도입으로 폭탄문제 방지

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.

- **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**
 - 각 대학 수시전형 과정 모니터링 및 신입생 선발 결과 분석 후 학생과 학부모 정보 제공
 - 수시전형 모범사례 발굴 · 전파, 입시 부정 철저 조사 및 엄단
- **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**
 -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에 교사 참여 확대
 - 수능 문항 검토에 대학생 참여 추진
- **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**
 -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 합리적 조정
- **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**

농지투기 근절로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겠습니다.

- 상속 · 이농 농지 소유주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위탁 의무 강화 추진
- 농지 소유 ·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투기 감시와 임차농 보호 강화
- 농지 임차료 상한제 도입 및 적정 임대차 기간 보장으로 임차농의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 촉진
- 농지실태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
 - 농지원부 정비, 농업경영체 등록, 직불금 점검 등 연계 농지 빅데이터 구축
 - 농지실태 전수조사 법적 근거 마련
- 주말 ·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제한(임차만 허용) 단계적 확대

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
 -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
 -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
 -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, 반려동물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
- 개물림 사고 등 위험 예방
 - 반려동물 양육 전 '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'를 통한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
 -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 및 '반려동물 행동지도서'를 양성
 - 보호자 없는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 지원 마련
-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
-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추진
 - 경찰서에 '동물학대범죄 전담팀' 설치, 지방정부에 '동물복지 전담부서' 확대
 -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'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' 추진
 - 길고양이 학대방지 및 공생제도 확립
- 반려동물 입양 원칙 확립 노력
 - 입양 중심의 허브 공간으로 직영 동물보호센터 조성 · 역할 확대
 -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무허가 등 영업 단속 강화, 신종 펫샵 근절 및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, 표준계약서 도입

○ 사람과 동물의 통합복지 확대

-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및 '동물복지진흥원' 설립으로 여러 법과 부처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 정비
- 반려동물 놀이터 · 테마파크, 동물장묘시설 조성

○ 국내 공공기관 급식 내 채식 선택권 보장, 민간으로 비건 문화 확산 노력



11

누구나 교통·주거권 보장



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.

○ 전국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

-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
- 기본주택(임대형)은 저렴한 임대료 · 고품질 · 장기간 거주 주택으로 80만호 공급
- 기본주택(분양형)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 기회 부여를 위해 누구나집형*, 건물분양형, 지분적립형, 이익공유형**, 공공분양형으로 60만호 공급
- * 사전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
- ** 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 공유
-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(감정가격→조성원가),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, 분양원가 공개 확대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'반값 아파트' 대량 공급
- 신규 공급물량의 30%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
-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

○ 아동 주거바우처 신설

- 중위소득 60%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함

○ 공공전세 공급으로 무주택자 주거권 강화

- LH, SH 등 기존 월세중심에서 월세, 반전세, 전세 등 세입자 선택제 도입
- 신규 공급물량 외 기존 임대에도 전세계약 선택 가능

○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10년차까지로 확대

○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, 재건축 활성화 지원

- 도시정비법으로 정해진 안전진단 기준을 지자체 조례사항으로 관한 이양
- 재개발, 재건축 여부를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

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부동산 공시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세 부담 완화

- 공시시장가액비율, 세부담 상한비율 등 하향조정

○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

- 공시가격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, 근로장려금 조정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계수 적용

2030세대 맞춤형 자가마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시드머니 5천만원 마련

- 본인부담 월 65만원에 은행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을 합하여 5년간 청년기본적금 마련
- 소요재원 3조원을 상속세 징수액(특별회계 신설에서 조달하여, 상위 1% 부자들이 납부한 상속세(2016~2020년 평균 2.8조원)를 청년들에게 돌려준다는 입법 취지

○ 수도권역에 2~6억원인 소형주택 우선 공급

- 용적을 확대 적용하고 토지조성원가제도를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 분양

4050세대를 위한 맞춤형 도시자가,
주말시골주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주중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에 소규모 농어촌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중 도시자가, 주말 시골주택사업 추진

○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 개선

- 전국단위 농막실태조사 실시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
- 주택과 가건물(비주택) 중간단계를 신설하고,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부담하는 등 농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구조 마련

6070세대 맞춤형 ‘안전한 내집’
평생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고령친화형 주택 리모델링 지원

- 미끄럼방지 바닥재, 주택내 응급비상벨, 화장실 · 욕실 지지대 손잡이 등 고령자친화형 건축 의무화
- 고령친화형 건축 및 개조 홍보강화
- 정부의 저리금융지원, 세제지원 등 확대
-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

재개발 · 재건축,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.

○ 신속협약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

- 500%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

○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

○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, 공공기여 비율 탄력적 조정

○ 고도제한지역, 1종 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

○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강화

1기 신도시를 지속 가능한
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.

○ 분당 · 산본 · 일산 · 중동 · 평촌 신도시 특별법 제정

-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
-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,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사업 지원
-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,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조성

부동산시장 질서를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.

- 실거주주택과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· 제한은 완화하고,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 · 제한은 강화
- 원룸 · 다가구 · 다세대 주택 등 불법 건축물 단속강화 및 불투명한 관리비,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 관행 개선
-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, 농지투기 금지
 -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 실효적 강화
- 부동산정책의 신뢰 회복
 -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
 -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
 -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

불법 증개축 주택 마지막 양성화하겠습니다.

-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안전과 미관, 재산권 제약 문제 해결
 -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마지막 양성화 조치를 시행
 - 경중을 따져 위반 정보가 경미한 사안은 구제, 그러나 반복 · 악성 중대 위반은 배제
 - 과도하게 까다롭고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축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위반사례 양산 방지

많은 국민이 부동산 개발 · 운영 수익을
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원칙 · 수단 · 기준을 명시, 환원(부과 · 징수 및 사용) 투명 공시

-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
-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축소하던 관행을 바로잡아 개발부담금 공정 부과 추진

○ 개발이익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개발리츠 도입

○ 사모리츠보다 유리한 세제지원 등 우호적 환경 조성을 통한 공모 · 상장형 리츠 활성화

○ 앵커리츠(모리츠) 육성과 상장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자산증식 도모

신축아파트 세대당
1.5대 주차면수 확보를 의무화 하겠습니다.

○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의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.5대의 주차면수 확보

-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 향상
- 기존 아파트와 빌라 등 연립주택 주차 부족 문제도 개선

○ 도심내 공원 · 도로 ·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 건설

○ 각종 주차장에 대한 어플 활용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 제고

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,
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○ 도시내 출퇴근 30분, 메가시티내 1시간, 지역 간 2시간 이내의 대중교통 이동 보장

- 지역 주요 도시간 고속철도 전면 도입, KTX와 SRT를 통합하여 수혜지역 확대
- 메가시티내 이동 증진을 위해 연결구간 보강 등을 통한 광역철도망 구축, 광역교통거점 환승센터 구축 확대
-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 플러스) 추가, 기존 지하철 급행화 · 지하화 추진

○ 막힘이 없는 전국 대중교통 통합연계교통망 구축

- 지역간 교통수단(철도, 항공, 고속버스)과 지역내 교통수단(도시철도, 시내버스) 연계

○ 장거리출퇴근자, 대중교통 빈번 이용자를 위한 정액권 Pass 발행

- 이용횟수제한과 거리별산 추가요금이 없는 정액권 DAY PASS 발행
- 일, 주, 월정액권 외에 48시간, 72시간, 가족권, 커플용, 외국인 방문자용, 회사/단체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여러 형태의 정액권 발행
- 지하철(일부 국철 구간), 버스를 대상으로 하고, 단계별로 수도권 KTX구간, 택시까지지 통합대중교통에 포함 추진
- 월정액권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(할인)요금 적용
- 정액권의 경우 일반요금의 30%(주)~50%(월) 할인율을 적용

KTX-SRT를 통합해 지역차별을 없애고,
시민불편을 해소하여
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.

○ 양사를 통합해 수서발 고속철도가 부산, 광주 뿐 아니라 창원, 포항, 진주, 밀양, 전주, 남원, 순천, 여수로 환승없이 갈 수 있도록 개선

○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% 더 인하. SRT와 새마을, 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

○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, 정차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 증편

○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를 보조하고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

○ KTX-SRT 통합으로 지방주민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철도효율성과 경쟁력 제고

도심내 주차 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.

- 도심내 공원 · 도로 ·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 건설
- 주차장에 대한 어플 활용 활성화로 공유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

도서민의 단절된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겠습니다.

- 배가 안다니는 섬이 없도록 하고 모든 도서를 1일 생활권화
 - 택배비용 부담 완화 추진
- 도서민을 대상으로 한 천원여객선, 내륙인 대상 명절 할인 등을 통해 도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섬 주민 · 섬 방문객 이동권 보장

12

힘찬 지방, 든든한 균형발전



01

힘찬 지방, 든든한 균형발전

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.

-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
-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
- 행정부 추가 이전 등 추진

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.

- 국민 여론을 수렴해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 · 시행
-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0%에서 50%로 상향 조정
 - 30%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, 나머지 20%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골고루 채용

‘남부 수도권’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.

-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
-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‘신산업 특화수도’를 2곳 이상 조성
- 가덕 신공항, 새만금 신공항, 수소트램,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
교통인프라 및 사회기반 시설 확충

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.

- **혁신도시,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거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**
- **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역량 강화 지원**
 - 첨단투자지구 및 R&D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첨단기업의 집적화 유도
 - 외투기업 R&D센터의 지방산단 유치 지원
- **스마트 그린산단 확대와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혁신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조성**
 - 산단을 스마트화·그린화를 통해 첨단·신산업을 육성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조성
 - 노후거점 산업단지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
 -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 교통비사업 지속 추진
- **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**
 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(현행 최대 100억)로 지방이전 및 신증설투자 촉진
 - 허브기업 중심의 기업군 이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
- **지역산업 전주기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기반 마련**
- **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심의 지역투자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**
 - 신규 상생모델 발굴로 지역고용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모델 창출
- **지역 자원 순환형 경제 기반 마련**
 - 산업·에너지·일자리·금융 등 지역내 선순환 구조 조성

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.

- **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, 추진체계,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은 마을공동체 기본법 마련**
- **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육성 및 안정적 판로 확대를 통한 마을 경제 활성화**

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
재정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.

○ 국세-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

-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,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, 지방세
신 세원 발굴 등 추진
- 지방교부세율(19.24%) 단계적 인상

○ 광역과 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“광역-기초 재정부담심의위원회” 신설

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의사결정에
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.

○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및 개표요건 폐지를 담은 실질적 주민소환제도 마련

○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

○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

힘찬 지방, 든든한 균형발전

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
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.

○ 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“지방상생발전위원회” 설치

○ 초광역 단위의 산업-현안 중심의 메가시티 활성화

- 부산·울산·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메가시티를 전국단위로 확산하여 지역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행·재정지원 강화

힘찬 지방, 든든한 균형발전

지방분권을 책임지는 자치분권위원회와
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가균형 발전위원회
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 강화

12

힘찬 지방, 든든한 균형발전

지방사업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-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정책성 ·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
-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적극 지원

13

힘찬 지방, 든든한 균형발전

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장기 미확정에 따른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- 예비타당성조사의 협조적 예비협의 강화 등을 통해 조사 소요 기간 단축
-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 · 전문성 제고 위해 사업특성별 전문 인력 양성

사회적 경제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
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
-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·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
- 사회적 경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
-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경영의 주인으로 참여
 -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
 -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선,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
- 사회적 경제 기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투자로 만드는 소외 없는 지역 사회 형성
 - 사회연대공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
 -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전환사업에 적극 투자

지자체/산업체/대학 동반성장 혁신체제로
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.

- 초광역단위 '지역대학혁신법' 설치,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
 - 대학혁신 추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, 지역균형 발전
 - 지역 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및 지역정착 청년 정주 여건 마련
- 학부단위, 권역별 국 · 사립대학 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
-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
 -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한 국립대 교육여건 향상 등 '서울대 10개 만들기' 추진
- 지역내 청년의 주거 · 문화 · 생활 · 취업문제 등 동시 해결 '대학도시' 구축
 - 캠퍼스 내 지역청년 대상 공공주택 건설 · 공급
 -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비영리 목적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확충
- 산학일체형 기업가형 대학 도입 등을 통한 대학전공과 직업간 미스매치 해소
 - 대기업 · 중견기업 계약학과 활성화 및 내실화, 대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
 - 대학(기술지주회사)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 · 공동투자 · 인수하여 운영
-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강국 실현
 - 인문사회 · 문화예술 · 기초과학 전문인력 육성 및 인프라 지원 등 기초학문 분야 집중 투자
 - 학문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학술연구 평가 · 관리 체제 구축

○ 인구소멸지역의 일정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제외 추진

- 주말 농촌주택(4都 3村) 추진으로 도시민의 소멸위기 농산촌 거주 확대

○ 농촌 불법투기 폐기물 국가책임 강화로 쾌적한 농산촌 조성

- 신속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지원단,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(올바로 시스템) 혁신 및 지자체 정보 공유 강화
- 불법폐기물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, 불법투기 행위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 강화, 불법투기 공익제보자 포상 확대 추진

농촌 인력난 해소 및 청년·여성농을 미래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.

○ ‘농업인력지원법’을 제정하여 농업 인력난 해소

- 전국·광역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, 시·군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지원강화
- 지역단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처우 개선
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, 농지확보 등 원스톱 지원강화

-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기간 등 확대
- 청년농업인 ‘체험-준비-심화-독립’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
- 농촌기본주택, 창업자금, 농지(임대, 구입), 멘토링 패키지 지원 확대
-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차기간 및 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
- 상속 세제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영농상속 공제한도 상향 추진

○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

- ‘여성농업인 중앙지원센터’ 설립을 지원하여 전국 여성농업인 협력활동 플랫폼 구축
- 지방정부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 지원

○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, 특수건강검진 확대로 농어업 분야 노동 안전권 보장

- 사회보험 형태의 농업노동 안전보험을 도입하여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
-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전체 농업인(51~70세)으로 단계적 확대

○ 고령(75세 이상) 은퇴농업인에게 ‘은퇴농 연금’ 지급방안 검토

- 은퇴농의 농지는 농지은행 매각·위탁 의무화, 신규·청년농에 우선 제공
- 은퇴농의 농지매각 양도세 조건 완화 검토

국가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
5%로 확대하고, 분권 · 협치 농정을
실현하겠습니다.

- 농업농촌 및 임업 · 산림 공익직불제 확대
- 탄소중립 실천, 토양탄소저장 확대, 친환경유기농업 등 환경생태 보전, 생물 다양성 증진, 동물복지 · 친환경자원순환 축산 · 조건불리지역 영농 등 실천 농가에 직불 지원
- 공익형직불금 미지급 농지 중 정당한 농지는 선별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추진
- 농정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필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
- 자치 분권형 농정을 실현하고 중앙-지방정부간 협치 제도화
-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로 농업인 중심 농정 실현
 - 예산 편성, 농정 협의 등에 농업인 참여 거버넌스 강화

임업 · 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
핵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.

- 숲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
 - 환경 친화적 숲가꾸기 중심의 산림 경영 확대
 - 신규 탄소 흡수원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 조성 확대
 - 임도 확장, 임업기계 확대 및 고성능화,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산림 인프라 대폭 확충
 - 지역단위 산림계획 수립 및 산림 경영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산림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산림관리
 - 산림 보전 및 생태복원 확대를 통한 백두대간 '숲 평화벨트' 구축 추진
- 산촌의 고유 특성을 살리고 순환경영 위한 '산림뉴딜 클러스터' 조성 추진
 - 자연휴양림, 폐교 · 빈집 등을 정비하여 '숲오피스' 제공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
 - 목재 및 산림부산물 생산 · 가공 및 소비를 통한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추진
 -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소규모 ·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
 - 공공 건축물 등 공공부문에 목재 의무 사용비율 설정 등 저탄소 목재 친화도시 조성 추진
- 탄소순환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임업경영 개선
 - 임업 직불제 안착 및 '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' 도입
 - '산자연금', '산지은행' 도입 검토
- 산림을 활용한 생애주기 산림복지 구현 및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
 - 숲속 치매예방, 숲 치유 건강증진 등 '숲 처방 프로그램' 운영
 - 숲 치유활동을 건강보험과 연계 추진
 - 산림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, 전국단위 사계절 산촌관광 프로그램 개발

○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 주도

- 산불 · 외래 산림병해충 방제 및 남북 · 동북아 협력 구축
- 북한 · 세계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
-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

어촌뉴딜 500 및 청년귀어귀촌 지원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방지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.

○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500*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삶 공간 만들기 사업 시행 및 내륙 어촌 마을에 대한 강마을 재생사업 신설

* '소득 · 일자리 창출(창업, 귀어귀촌 연계)+주거 안정(빈집정비, 임대주택)+삶의 질 개선(생활SOC 구축)+안전(어항시설 개선)'을 연계한 '3+1' 사업으로 확장

○ 청년 어선임대사업 신설 등 청년귀어귀촌 지원

○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 공익 직불제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

- 휴어기에 어선원 생활안정지원제도 마련

○ 어가 경영부담 감소 및 소득 안정 추진

- 군 급식 및 학교 급식용 수산물의 국내산 공급 추진
- 저온보관시설 및 양식업 등에 농사용 전력 확대 적용 추진

○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사람이 북적이는 어촌 조성

○ 해양관광지구 지정, 해양치유산업, 마리나산업, 레저관광산업 등 육성

○ 연안 수변공원 조성 및 연안정비로 해안가 안전 강화

○ 도심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

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업무와 여가를
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비수도권 거점지역에 청년 근로자들이 유연근무 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마련



선진국가 기반 마련

13 평화국가 건설

14 든직한 외교 · 국방

15 국민주권 정치 · 사법 개혁



13

평화국가 건설



01

평화국가 건설

완전한 비핵화와
평화체제 수립을 위해
노력하겠습니다.

○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성 강화

- 다양한 비핵화 협상틀 구성을 통한 비핵화 협상 진척 유도

○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

-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촉구
- 주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의 포괄적 · 상시적 면제 추진 노력

○ 스내백(조건부 제재완화)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추진

○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노력

지역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키워하겠습니다.

○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적극 추진

-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 및 다방면 교류협력 추진 지원
- 서울-평양 상주대표부 등 남북관계 제도화
-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, 남북 교류협력 권한 및 자율성 강화

○ 탈북민 정착지원, 통일교육, 남북협력 상담 등 지역에서 평화통일 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통일+센터 설치 지역 확대

○ 통일교육 선도대학 활성화 및 통일교육 거점대학 육성

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남북 보건의료협력,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 조성

- 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추진
- 신청자 전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, 이산가족 고향 방문, 고향 장례 등 추진
- 인도지원 · 개발협력,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북한주민 인권증진 추진
-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
-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공동 실현을 위한 남북 대화 · 협력 추진

○ 남북 문화 · 체육 · 사회 · 역사 · 학술 · 과학기술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

- 남북 공동 각종 기념행사 추진 및 문화 · 예술 공연 상호 방문 추진
- 남북 지식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학술기반 조성 및 공동연구 추진
- 북한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 확대

○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대비한 기반 조성

-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, 남북경협결제시스템 구축 추진
- 남북미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복원,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

○ 청년 · 미래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

-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개최 추진
- 남북 대학생 역사유적 탐방단 상호 교환 추진
-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
- 공연 · 체육 · 예술 · 교육 등 분야에서 남북한 청년 · 미래세대 교류 기회 마련

○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혁신

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획기적 개선
-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사회통합 제고

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
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.

○ 국무총리실 산하 '1325위원회' 설치

- 안보리 1325 결의안을 기반으로 한 여성·평화·안보 정책 수립
-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실현
- 해외 개발협력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여성평화ODA 정책 추진

○ 일본군'위안부'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·종합적 추진체계 마련

- 전시 인권·성착취 문제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
- 일본군'위안부'기록물 자료 조사·수집·관리, 연구 집적, 교육, 국제사회 연대 및 홍보

○ 일본군'위안부'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

○ 일본군'위안부'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



뜸직한 외교 · 국방



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미중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
-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
- 한중간 실질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
- 투 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
 - 김대중 ·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시킨 새로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모델 추진
- 한러간 다양한 협력 잠재력의 발굴과 실현
-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
 - 상호 존중과 호혜적 한 · 아세안 관계 지향
 - EU · 영국과 경제 ·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
 - 호주, 인도, 중동, 중남미, 아프리카 등과 실질협력 확대

역지력과 유연한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
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.

○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

-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
- 제재와 관여,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협상력 강화
- 비핵화 과정과 평화과정의 시너지 있는 진행, 국제공조와 남북 대화의 상호보완적 운영

○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역내 군비경쟁 등 안보 불확실성 관리

- 동맹기반의 역지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 등 안보외교 강화

○ 비핵 · 평화 진전에 따른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적 경제지원 준비

- '한반도 경제, 사회문화, 생명공동체' 위한 국제협력 건인
- 북한의 미 · 일 등과의 관계 확대지지 및 세계 경제 편입 지원

포스트코로나 시대전환에 대응할
새로운 외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.

○ '인간안보' 매개의 포스트코로나시대 국제연대와 협력 선도

- 보건, 환경, 공동체 등 인간안보 분야에서 사람중심의 외교 실행
- 초국경 신안보 위협 조기경보 및 국제공조 통한 국민생활 보호
- 공포와 빈곤 퇴치 관련 국제협력 아젠다 주도

○ 동북아 역내 비전통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추진

- 한미일, 한중일, 남북중, 남북러 등 중규모의 다자협력네트워크 활성화
- 남북, 미 · 중 · 일 · 러 및 몽골 등 동북아 7개국 연성안보 협력레짐 추진

○ 국민 안심의 신안보 외교 적극 추진

- 해외 테러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
- 팬데믹, 기후위기 등 해외발 신안보 위협 조기경보 및 대응 체계 정비

○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반구축과 경제안보외교 강화

- 정부 내 경제 · 기술과 안보의 연계, 융합체계 정립
- 첨단산업 핵심품목 수급의 조기경보체계 구축
- 글로벌 수소경제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국제협력 건인
- 반도체, 배터리 등 국가안보 직결산업의 원재료 수급 안정화 외교

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추진
-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

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.

- 첨단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R&D 역량 강화
- 국방 · 방산비리 원천 차단
-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
- 유 · 무인 전투체계 발전과 감시 · 정찰 및 경계 체계의 지속 보강
- AI, 우주 · 위성, 군사로봇 분야 등 국방 신산업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
-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산업전략본부와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력 강화 추진
- 국내 방산기업들의 부품국산화 개발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
-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 부품인증 업무 민간 이관 확대

국민을 최우선하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.

- 군 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복지 · 체육시설 등 민간과의 공유 확대
- 국방 주요 의사결정 체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 강화
-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국민 검증 확대
- 국방 관련 자료 및 기록 개방 추진
- 국방 R&D 시설 및 장비의 산 · 학 · 연 공유체계 구축, 국가 전체의 R&D 역량 강화

국가미래를 뒷받침하는
정보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식량 · 백신 · 에너지 등 글로벌 위기 선제대응 · 국민안전 정보역량 강화
- 세계 주요국 정책 · 글로벌 트렌드 · 이슈 등 미래전략 정보 수집 역량 확충
-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및 방산 기술 보호 역량 강화

15

국민주권 정치·사법 개혁



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겠습니다.

○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

-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, 결선투표제 도입
- 여·야 합의를 통해 개헌시 재임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단축하고, 중임제도 적용 배제

○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헌법에 명문화

○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추진

-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
-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 실질적 보장
-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 존중

○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'국민통합추진위원회' 구성

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,
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.

○ 국회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

-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회 국정감사 기능 강화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

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, 민의를
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.

○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

- 윤리심사 안건처리 시한을 단계별로 법정화

○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

-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
-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,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

○ 국민도 보다 쉽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

- 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심사 지원 조직 신설 추진

청년정치 도전 기회를 활짝 열겠습니다.

- **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 34세 이하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**
- **청년 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**
 - 청년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보전
 -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- **성별 · 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**
- **국회의장 자문기구인 '청년국회' 신설을 통해 청년의 입법과정 참여 도모**
- **정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고등학생,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공정한 청년인턴십 기회 제공**

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.

- **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전환 핵심 의제 논의 추진**
- **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실질화 제고**

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,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생명권 · 안전권 · 주거권 · 건강권, 자기결정권, 알권리 등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
-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
 - 국가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제도화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무 강화
- 헌법재판관(총 9인) 구성방식을 변경
 -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지명(3인)을 폐지하고, 6인을 국회에서 선출
 - 법관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화 추진

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.

- 수사 ·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
-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
- 검사의 기소 ·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
-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 · 물적 역량을 보강
- 검찰 · 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,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제고
-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하여 경력변호사 중에서 검사 선발

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, 직무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.

- 감사원장 · 감사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되도록 선임절차를 개선하고, 퇴직 후 일정기간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
- 직무감찰의 실효성은 제고하면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
 - 뇌물 ·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강화하되, 그 이외에는 직무감찰은 원칙적으로 회계부정 시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
-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 누락됐던 검찰청 · 기초지자체 · 재외공관 등 사각 지대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심사를 확대
- 감사 상대방의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보장을 강화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 보완

벌금 · 몰수 · 추징금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.

- 자산 · 소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 · 범칙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벌금 · 범칙금체계 도입을 검토
-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도입
- 몰수 ·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을 강화
-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시 부가형으로만 선고가 가능한 몰수제도를 개선 (독립몰수제 도입)하여 범죄수의 환수의 실효성을 제고

선거제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을 통한
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.

- 비례대표제 확대
- 비례대표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
- 향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추진

국민이 국민생활의 주요정책을
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
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연금제도, 병역제도 등 국민생활의 주요정책을 국민투표로 직접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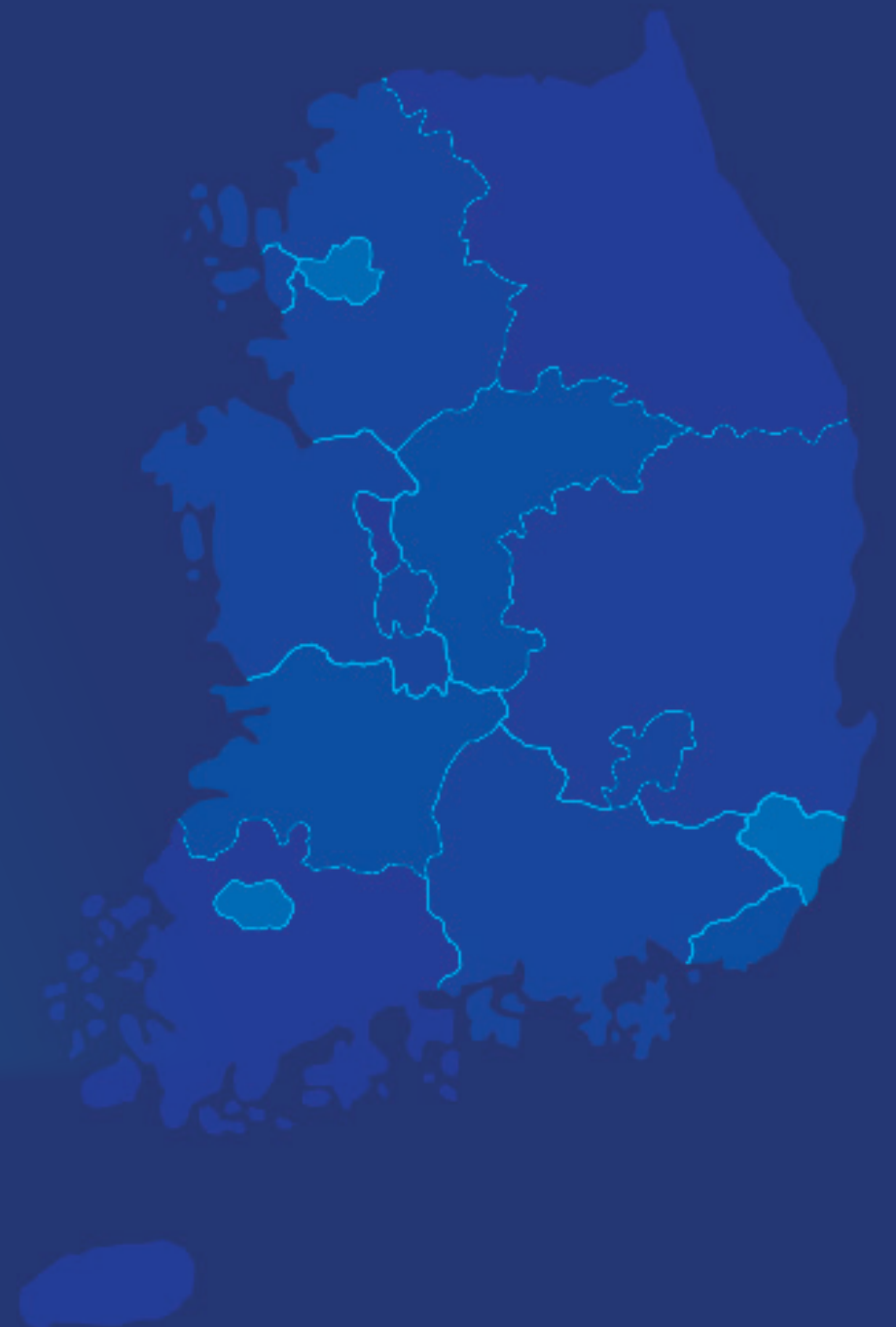
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.

- 과거사 발굴과 조사, 지원방안마련, 희생자 명예회복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능 강화

국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겠습니다.

- 공무원 전문직 및 개방형 임용제 확대, 중앙과 지방의 우수인력 교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
- 성과보상 개편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알맞은 확실한 상벌체계 마련

**더 든든하게
더 유능하게
17개 시·도공약**



서울을 서울답게, 새로운 나의 서울

01.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.

-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신규주택 107만호를 공급하여 튼튼한 주거 사다리 조성

01-1. 1세대 1주택 재산세 완화

- 재산세 : ① 세부담 상한율 완화 : 5~30% ⇒ 5~10%
- 취득세 : 취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을 '6억~12억~12억이상'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경감
* 과세건수 8만건(2021년 기준), 연평균 3천억원 세제혜택

〈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 신설 방안〉

	1세대 1주택	공동보유 1주택	다주택	법인
현행	11억 원	12억 원	6억 원	0원
공약	15억 원 (55% 공동주택 비과세 전환)		10억 원	3억 원

부동산 규제혁신 공약

(1)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 규제완화 추진

- 재개발/재건축 용적률 500% 상향
- 재개발/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국가권한 폐지 및 광역지자체 이양
- 재건축 세입자 우선 분양권

(2) 금융규제 혁신
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비율을 90%까지 확대(지역·면적·가격 등 고려)
- 누구나 주택보증시스템 도입(SH 23만호 우선 적용)
 -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해소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은행 1등급 금리로 전세자금을 조달 → 월세 주거비용 40% 이상 절감

(3) 세제 혁신

- 역올한 종부세 구제(종부세 합산배제, 1주택자로 간주)
 - 대상 : 일시적 2가구, 농촌주택 포함 2주택, 실임대 목적 2주택(4년 이상 임대사업 영위)

②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선 : "스톱-고 제도"(stop-go policy) 도입

- 스톱 조건(전년도 주택가격 상승률 > 전년도 경제성장률)
- 고 조건(주택가격상승률 < 경제성장률)

(4)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

- 질 좋은 중저가 분양전환주택 대규모 공급
- 10% 지분투자료 거주권 확보
- 10년 거주후 최초 공급가격에 내집마련 가능
-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월세 주거비용 → 누구나 보증시스템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6%에서 3%로 인하

(5) 신규택지 개발

- 구룡마을 1만 2천 세대 공급(청년에게 5,000세대 공급)
- 내곡동 65만평 개발(청년·신혼 5만 세대)
- 육사 이전부지(10만호) 등

02.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.

① 도시철도의 단계적 지하화

- 사람은 지상,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·도로의 지하화 추진
- 지하철 1·2·4호선(경부선-경인선 구간)의 우선 지하화, 경의선, 중앙선, GTX-C 지상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
 - 철도부지와 주변부지 통합개발 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
- 경부고속도로 한남~양재 구간의 지하화 추진 및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조기 완공
 -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구간을 지하복층터널로 입체화
 -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추진
- 낙후되어 있는 도심 차량기지 인근지역 개발
 - 지역 여건에 따라 외곽이전 및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 사례처럼 철도차량기지를 유지하면서 상부 개발 방식으로 추진
- 지하철 4·6·7호는 도선부고 급행 노선 건설 추진
- GTX-A 및 신분당선 연장선(서울시청~상명대~은평구) 조속 추진
- 경전철 동북선 조기 완공 및 면목선·강북횡단선·목동선·난곡선 추진 적극 지원

2 모두가 역세권 도보 10분내 도시철도망 구축 및 지하철역사 신설

- 강북 도심 내 경전철 건설 및 기 추진노선 연장으로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
- 기존 지하철역 간 거리가 멀어 접근성 낮았던 지역에 지하철역사 신설
 - 강남북 격차 해소 및 지하철 환승·이동편의성 개선
- 강북지역 신노선 건설로 강북지역 이동성 확보 및 강남 접근성 제고
- 노선 직결화로 환승 불편 및 신속 이동 제약 요인 해소
 - 수도권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수도권과 서울 시민의 상호 접근성 강화

세부공약	비고
• 2호선 서남권 연장(김포-신림)	• 2021-2030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단계 선정되었으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노선 ※ 1단계 선정대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노선을 제외한 노선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인 B/C 0.70이상이거나 AHP 0.5이상 만족하는 노선
• 서대문 경전철(디지털미디어시티역-세검정)	
• DMC 트램(상암동-월드컵경기장)	
• G밸리 트램(가산디지털단지역-구로디지털단지역)	
• 7호선 급행화(장암역-부평구청역)	• 2022년 대선 공약 노선 ※ 5호선 굽은다리역~둔촌역 직결화 공약은(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)
• 3-4호선 직결화(독립문역-서울역(서대문역 신설), 동대문역-약수역(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설))	
•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및 세종정상명대역 신설	
• 동북선 연장(방학-마들-상계 연장)	
•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	
•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(청담역~학동사거리역 사이) 신설	
• 신강북선 신설(4·19민주묘지역-강북구청-광운대학교-상봉역)	

03. 교통복지도시 서울,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

- 1 65세 이상 노인·장애인, 마을·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행**
 - 소요예산이 적은 마을버스(764억)를 우선 시행, 조속한 시일 내에 시내버스(3,456억) 시행
- 2 장애인택시, 어디서 어떤 택시를 타도 모두 1천원**
 - 장애인 이동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저렴한 장애인 천원택시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

- 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교통복지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비싸고 복잡한 장애인택시 요금체계를 1천원으로 통일
 - * 장애인콜택시(특장차 623대), 임차택시(61대), 장애인복지콜(158대), 바우처택시(12811대)
- 휠체어 탑승가능한 장애인콜택시(특장차)의 경우, 매년 25%씩 늘려 임기내 두 배 1,300대(+α) 증차, 특장차 이외의 장애인택시의 경우에도 매해 수요조사를 통해 증차에 적극 추진
-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을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전역으로 확대하고, 광역자치체간 공동협력을 추진("수도권 광역이동지원센터" 설립계획 수립 및 추진)

04. 자영업·소상공인의 오랜 시름,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 없애겠습니다.

- 누구나 보증시스템 [임차인 신용보증]
 - 보증기관(HUG, SGI 등)의 보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신용력을 보장
 - [금리차별 해소]
 - 이를 기반으로 금리차별을 해소해 최저 수준의 보증금 대출금리를 적용
 - [원스톱 솔루션 제공]
 - 계약, 대출, 보증 등 일체의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혁신적인 금융플랫폼
-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 [보증금반환보증 제도]
 - 상가임차인의 신용을 보강해 소상공인의 보증금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, 보증금대출 지원을 확대
 - [보증금 담보대출]
 -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생활자금을 융통
 - ※ 2019년 상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인식부족, 자율가입 등으로 비활성화 → 임대인 임차인간 보증금 반환 문제 빈번히 발생

1 1인당 년 1,300만원 이자부담을 낮추겠습니다.

- 임대료 경감 대책
 - 임차인은 보증금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을 늘리고 비싼 월세를 줄여 월 임대료 부담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음 → 전월세 전환율(6%대→3%)

- 임차인당 임대료 절감효과 1,300만원 → 1,300만원 = 10.5조원/80만 임차인
 - 총 임대료 절감효과 10.5조원 → 10.5조원 = [280조원 × (전환율6.7% - 금리3%)]
 * 280조원은 총보증금 규모(3.5억원 × 80만 임차인)
 * 서울 거주 상가임차인 80만명이 100%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

②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.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의 무게를 덜어드리겠습니다

- 이자부담 경감 대책
 - 임차인은 저리의 보증금담보대출을 활용해 긴급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음 → 서민금융기능 강화
 - 임차인이 저리(3%)의 보증금 담보대출을 활용해 필요시 최대 3,500만원 한도내에서 생활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 (*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한 LTV 50% 적용)

- 대환대출시, 임차주 금리대별 이자절감액	- 600만원 [20% 고금리 대출 대환시] - 250만원 [10% 고금리 대출 대환시] - 100만원 [6% 고금리 대출 대환시]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05.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.

-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
 - 대학생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및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임대 및 분양 추진
- 저층주거단지에서도 택배보관, 공구대여, 순찰 등 아파트 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
-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 확대 보급
- 1인 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
- 긴급자금 대출, 개인 건강검진, 여성 안심귀가,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 내실화
-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원룸/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

06.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.

- 강북과 강남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전략을 추진, 강북이 더 발전하고, 그 이익을 강북 발전에 연계하는 강남권 개발이익 강북권 공유
- 관악·구로의 스타트업, 가산·구로의 중소기업, 마곡자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로 조성
-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, 서울연구원 등 주요 교육·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
- 창동~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·의료·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

07.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.

-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육성
-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업 성장 지원
- 서울디지털헬스케어클러스터 구축
 - 국립병원 간 또는 주요 병원 간 의료데이터협력 및 산업연계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제도개선
 - (가칭) 서울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(상계)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기존의 홍릉 바이오 R&D클러스터의 확대
 - 대학병원의 산업화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원
- 5대 권역별 특화클러스터 조성
 - (서남) 마곡·구로금천-관악을 연계하는 대기업-스타트업 연계 구축
 - (동남) 인공지능, 데이터사이언스 등 IT기반 스타트업 중심구역
 - (동북) 홍릉-창동-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의약 관련 산업 및 성수를 중심으로하는 소셜벤처구역
 - (서북) 서울혁신파크 일대를 서울의 지식거점으로 육성
 - (여의도) 글로벌 금융·핀테크·빅테크가 융합하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
- 디지털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, '여의도-용산 혁신금융특구' 구축
 - (여의도-용산)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,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 계획과 연계하여 홍콩 등 유수의 국제금융도시 수준 글로벌 인센티브 제공(금융투자 관련 외국법인·외국인 종사자 대상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등)
- 금융특구 기반, 혁신창업과 첨단산업벨트를 연계하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
 - (여의도-서남북 연계) 여의도(상업금융)·용산(혁신금융) - 마포(창업, 상암DMC(콘텐츠) - 마곡(NT, BT, GT/AI), 구로·금천 G밸리(IoT융복합 IT장비) 연결
 - (혁신허브)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, 첨단 시제품 제작소 30개 구축, 혁신제품·서비스의 서울시 공공혁신조달 연계 강화, 청년 유니콘 10개 육성

08. 서울을 문화·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.

- 한류 관광과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
 - 한류관광객 유입이 본격화 될 '위드코로나'시대를 준비하고,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·문화 산업을 지원
 - 종로구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한류 관광의 부가가치 제고
-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·컨벤션 산업 육성
- 권역별 문화·엔터테인먼트 시설 확대
 - 상암 DMC 일대에 방송·문화콘텐츠·게임 산업 인프라 확충
 - 강남과 성수의 K-POP 인프라 확대

- 창동의 K-POP 전용극장 '서울 아레나' 조기 완공
- 합지로, 샤프수길, 송리단길과 같은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 적극 육성

09.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.

- 도시형 재생에너지 생산,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화석연료 의존 감축
- 제로에너지 건물의 공공분야 우선 도입 및 민간영역까지 확대
 - 공공분야에서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
 -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및 신규공공주택의 건축기준 상향
-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획기적 전환 및 인프라 확충
 - 전기·수소차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공공/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
 -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
 - 2030년까지 배달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면 전환 : 자전거 확대 및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 100% (배달용)
-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통한 자원순환 모범도시
- 서울시립대학교의 재활용 및 친환경기술 관련 전문대학원 설치
- (건물) 그린건축 대전환, 에너지효율 1등급 도시
 -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,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보급지원 확대, 에너지효율(ESCO) 컨설턴트 2천명 육성
 - 2030까지 그린 스마트스쿨 50% 전환, 건물일체형(BIPV) 태양광 지원 확대
- (수송)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도시, 친환경차량 전환 가속화
 - 통학 차량·마을버스 등 무공해 차 전면 교체, 차량 배출가스 등급별 스티커 발급, 공해차량 제한지역(LEZ) 확대
 - 서울시 대중교통혁신(MaaS) 통합플랫폼 구축, 퍼스널 모빌리티(PM) 규제혁파, 자율주행·차량공유 특구 확대, 서울 모빌리티 데이터센터 구축
- (폐기물)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도시, 제로-웨이스트 서울
 - 일회용품·포장재 없는 상점 1천개 육성, 재생원료 사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, 친환경 아이스팩 의무화
 - 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, 5대 권역별 업사이클링 문화센터 구축
 - 다회용기 대여·세척 스타트업 지원, 친환경 택배박스 표준화 지침 마련 등 그린배송 인프라 구축
- (미세먼지)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, 생활밀착형 대기질 관리제도
 - 생활권 인근 소규모·영세사업장 배출 감축 지원,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
 - 빅데이터와 AI기술 활용, 지역·시간대별 실시간 관측망 구축 및 대기질 정보 제공

- (기후안전)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, 스마트한 기후재난대응 시스템 구축
 - 빅데이터와 AI 분석 기반, 기상변동성 증가에 대한 예보-대응-모니터링 전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
 - 기후위기 시나리오 기반 서울시 도시재해대응계획 정비 및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
- (스마트그린) 탄소중립도시 맞춤형 그린전환
 -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,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(VPP) 프로젝트 확대,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(FT) 지원 확대

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

01.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.

-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확대
-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
- 가덕도신공항~부산신항~철도 연계 동북아 물류 트라이포트(Tri-Port) 구축
- 가덕도 일원 공항복합도시 건설, 글로벌 물류단지 조성 및 물류기업 유치
- 가덕도신공항을 근거지로 하는 LCC(Low-Cost Carrier) 등 항공사 유치 추진
-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조속 완료 및 2단계 사업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
- 부산 시내 저탄소·친환경 대중교통 확충으로 박람회 예정지 접근성 강화
-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을 위한 정부 고위급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

02. 해운산업 메카로 부산을 육성하겠습니다.

- 해운거점소 설립
- 해양데이터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및 운영
- HMM 등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
- 부산형 공유대학 '연합해양물류 과장' 신설로 해양물류 지역인재 육성
- 한국글로벌터미널운영회사(Korea Global Terminal Operator : K-GTO) 설립 추진
-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극 검토

03.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로 핀테크, 디지털자산거래 중심으로 부산을 육성하겠습니다.

- 핀테크 연구단지 조성 및 지역기업 디지털 지원 강화
-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
- 가상화폐 공개, 증권형 토큰 발행 등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

04.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·울·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부·울·경 광역철도망 확충
- 부·울·경-가덕도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GTX급 철도망 구축
- 도시철도 하단~녹산선,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 웅동~경남도청 구간 연장 추진
- 부산신항~김해 고속도로, 가덕대교~송정C 고가도로 등 부·울·경 광역도로망 확충
- 부전역을 부·울·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, 주변 지역 종합 개발 추진
- 전남 광주~부산 2시간 남해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국토 남부권 연계성 강화
- 부·울·경 지역 내 통합환승, 광역급행버스, 광역BRT 등 광역교통시스템 구축

05.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숲길, 청년창업문화공간, 청년기본주택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.

-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철도시설 재배치 추진
- 기존 경부선 철도 구간 및 유휴부지 종합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

06. '인공지능(AI) 미래산업도시 부산'을 건설하겠습니다.

- AI 미래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, 초일류 AI 기업·인재 육성
- 대기업(삼성, LG 등) 및 글로벌기업(구글, MS, IBM 등) AI 전문지사 파격 유치
- 미래기술 관련 핵심 정부출연연구기관(ETRI, KISTI 등) 부산분원 유치
- AI 특성화고 설립 및 학제·전공 파과 AI중심 교육과정 개설, 대입 특기전형 설치
- KAIST 및 POSTECH 등 부산분원, 즉 AI 전문·융합대학원 유치
- 센텀지구 첨단산단 등 혁신도시 관련지역 대상 미래도시 시범사업 즉각 추진

쾌적한 친환경 시민중심 도시! 대구의 성공적인 산업전환!

01. KTX 경부선의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분절된 도심 구간을 연결하고 하나의 대구를 위한 경부선 지하화 추진
- 지하화 구간을 한국형 센트럴 파크로 조성

02. 대구 군기지를 이전해 도심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.

- K-2 공군기지 이전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 적극 지원
- 한국군 주둔지인 제2작전사령부, 제5군수지원사령부, 50사단 및 공군방공포병학교의 단계적 이전

03. 미래차·로봇·의료산업을 이끌어갈 혁신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.

- 미래차 부품 R&D센터와 스마트 생산설비를 갖춘 '미래형 전기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' 조성
- 전국 최고의 주행시험장과 연계한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, 실증 플랫폼 구축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
- 서비스로봇의 R&D부터 규제개선, 테스트베드, 사업화까지 로봇산업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지원
-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서비스로봇을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 지원
- 대구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 특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설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
- 첨단의료복합단지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한국뇌연구원 등 기존에 지정된 클러스터를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추진
- 대구에 소재한 한국뇌연구원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뇌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

04. 대구·경북을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2028년까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
- 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 서부권 광역교통망 개선 추진
 - 서대구~의성을 잇는 광역 철도 조속 건설
 - 대구산업선 철도의 조기 복선화
 -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
- 중앙고속도로 금호JC에서 의성C까지 4차선의 구간, 6차선 확대 단계적 추진
- 공항 이전 부지 혁신도시 건설

05. 대구를 친환경 물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.

- 취수원 다변화와 더불어 구미국가산단 제5단지 분양 활성화, 해평습지 국가정원 조성 등 상생 지원 적극 지원
-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심 물순환시스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지원
-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국제인증 실현 지원

인천의 내일이 더욱 커집니다.

01. 인천의 교통혁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.

- 지하철 1호선·경인고속도로·인천대로 3대 지하화 실현
- 서울-인천(2·5·9호선)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
-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및 GTX-B, D(Y자), 공항철도급행화 추진

02. 인천의 오래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.

-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, 영흥 석탄발전소 청정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 실현
-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내항재생사업 및 캠프마켓 시민공원화사업 실행
- 제2 인천의료원 설립, 감염병전문병원 지정, 국립대의대 신설 박차

03. 인천의 경제를 재도약시키겠습니다.

- 인천의 미래를 위한 바이오, 항공정비, 첨단기계 산업 육성 지원
- 미래 정보화 산업의 핵심인 D(데이터)·N(네트워크)·A(인공지능) 선도 기반
- 그린 수소 산업 구축을 통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 주도

04.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-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
 - 역세권 개발 및 시민 수요에 맞는 재건축·재개발·재생 활성화 지원
 - 원도심 공공주차장 확대 조성 지원
 - 원도시 지중화 사업 적극 지원
-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 완화
- 강화·옹진 도서·접경 지역의 수도권규제법 적용 제외

05. 지역물길을 복원하고 해양친수공간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.

- 굴포천·승기천 등 내륙 지역 물길 복원 조성
- 소래·월미 등 해양 친수공간 확대 조성
- 소래 국가공원 지정 및 권역별 특화 대공원 확대 조성

민주화의 성지에서 잘 사는 도시로, 광주!

01. 군공항 이전_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발전계획을 포함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·개정 추진
-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4차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실증 스마트시티 조성

02. 인공지능(AI) 대표 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.

- AI 융합 메타버스 신산업단지 및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
- 국립 인공지능 연구원 설립 및 AI 특화 기업맞춤형 종합교육센터 설립

03.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미래형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및 R&D 특화캠퍼스 조성

04. 호남RE300_ 서남해권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구축
- 재생발전단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
- 해상풍력 연계형 RE100 산단 구축

05. 광주전남 초광역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수도권 수준의 호남권 광역교통망 조성
- 광주전남 관문공항 중심 서남부 공항경제권 구축
- 여수·광양항을 아시아최고의 스마트복합항만으로 조성

미래 우주산업 선도하는 과학 혁신도시 대전!

01. 세계를 주도하는 첨단 과학수도를 만들겠습니다.

- 대덕특구 재창조 완성
- K-바이오 파운드리 구축
- AI-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 조성
- 나노융합기반 첨단센서 허브 조성

02. 혁신도시 완성과 원도심 재창조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.

-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
- 대전역세권 개발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원도심 재창조
-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

03. 항공우주청 유치로 대전을 미래 우주산업전환 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.

-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
- 우주국방 특성화 충청권 메가시티 국가산단 조성
- 우주국방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지원 강화

04. 『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』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.

- 대전~세종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
- 대전~세종~충북 광역철도 조기 건설
-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(화덕JCT~ 서대전JCT)
- 충남~대전~충북(보령~대전~보은)고속도로 건설

05. 경부선·호남선 철도 지하화 및 대전조차장 레일스카이 복합단지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.

- 도심통과 경부선·호남선 철도 지하화
- 경부선: 대덕구 신대동 ~ 동구 판암C까지 13km 구간
- 호남선: 대덕구 오정동 ~ 서구 가수원까지 11km 구간
- 대전조차장부지 레일스카이 복합단지 조성
- 공공주택 등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개발

06.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개발·재건축을 추진하고 원도심 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.

-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재개발·재건축 추진
- 둔산지구, 송강지구, 송촌지구, 노은지구, 관저지구 등
- 원도심 주택정비사업 추진
- 주거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

07. 태어나서 취업할 때까지 전 연령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.

-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형 양육수당 확대
- 현재 출생 후 36개월까지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
- 예비 초, 중, 고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지급
- 학생 입학 시 의류, 도서, 스마트기기 등 일시적으로 많은 소비지출에 대한 가계 지원
- 청소년 진로진학교육 활성화
- 청소년의 진로교육박람회, 이색직업체험박람회 등 추진
- 청년 취업, 창업 지원, 주거 안정 지원

울산 르네상스, 청년수도 울산! 다음 60년을 준비합니다. 울산이 젊어집니다.

01.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산업도시

- 주력산업 성장고도화, 스마트 대전환 추진
 - 스마트시티 민간·공공 융합 빅데이터·클라우드센터 조성
 - 자동차·선박·UAM 등 수소 기반의 Eco-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조성
 - 정보통신융합 전기추진체계 구축으로 선박기술 고도화 지원
 - 차세대전지 연구개발 등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인프라 구축
- 탄소중립·미래산업 육성
 - 부유식 해상풍력 한태평양 제조기지 구축
 - 국가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울산탄소중립산업특화단지 조성
 -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원전해체 산업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
 - 계능기술원 건립 등 계능 ICT 융합 거점 구축 및 인프라 조성
 - 수중거주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조성 등 해저도시 건설 기반 조성

02.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

- 부유식 해상풍력 한태평양 제조기지 구축
 - '25년까지 2.5GW급, '30년까지 9G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
 - 해상풍력 전문연구소·인증센터·기업지원센터 등 종합지원복합플랫폼 조성
 - 해상풍력발전으로 울산형 무상교통, 무상전기, 그린에너지 기본소득 추진
- 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수소도시 구축
 - 수소차 50만대 생산 기반 구축 및 수소기업 200개 육성·지원
 - 수소 모빌리티 부품기술 지원센터 설립
 - 주거·환경, 미래교통, 관광문화의 거점으로 태화강역 수소복합허브 조성
 - 해상풍력 발전을 활용한 세계 최대 그린 수소생산기지로 육성

03.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복지도시

- 여성이 안심하고 차별 없는 여성친화도시 구축
 - 오후 8시까지 돌봄 걱정 없는 울산형 완전돌봄보장제 도입
 - 출산·양육 차별 없는 우대정책으로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지원·확대

- 성평등노동지원센터 설립으로 좋은 여성일자리 통합지원플랫폼 구축
- 울산형 청년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울산청년 미래보장
 - 청년이 설계하고 청년이 집행·운영하는 청년정책위원회·청년보좌관 신설
 - 취·창업·투자 등 실패해도 괜찮은 도전과 양성 청년 종합지원플랫폼 구축
 - 청년·신혼부부 주거,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
 - 상담·교육·수당·금융 지원 등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
-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대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건강권 보장
 -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으로 감염병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
 -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원으로 지역 인재 진학률 40%, 필수 의료인력 확충
 -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설립으로 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 기반 구축
 -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로 장애인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

04.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의문화도시

- 지식정보의 미래를 열고 과학·창의도시 구축
 - 국립 울산 탄소중립전문과학관을 미래 과학인재 교육의 국가거점으로 추진
 - 울산 주력산업 미래기업관 유치로 미래산업기술을 체험하는 과학공원 조성
 - 국내 최고의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고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
- 즐거움이 다른 꿀잼문화도시 추진
 -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으로 문화콘텐츠 중심의 예술창업·문화산업 육성
 -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음악도시 가입으로 국제문화도시 위상 강화
 -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와 대곡천 일대 역사관광자원화 사업 추진
 - 영남알프스 관광단지 및 대왕암공원 관광지 지정으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
 - 빅데이터·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관광도시로 재밌고 창의적 여행환경 조성

05. 경제·산업·도시인프라의 중심성을 갖춘 초광역거점도시

- 대심도 GTX 건설로 1시간 초고속 교통망 확충
- 광역 간선급행버스(BRT) 체계 구축·운영
- 해양·스마트복합·에너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

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.

01.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향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'수도 조항'을 신설해 추진
-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뿐만 아니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추진

02.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행·재정적 권한과 특례 부여를 통한 맞춤형 자치권 확립

03.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과 법원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-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
- 세종시의 증가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설치 추진

04.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세종에 문화·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국립박물관 단지 내 국립민속박물관, 디지털 문화유산센터, 도시건축 박물관, 디자인 박물관, 어린이 박물관 조성
-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규정 신설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환경 및 제도 기반 구축

05. 세종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AI·자율주행·빅데이터·첨단의료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
- 스마트 헬스시티가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 잡도록 브랜드화
- 보건·의료기관과 헬스케어 관련 기업 유치 지원
- 보건 위기 상황 대응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세종의료원 설립 지원

06. 세종시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대전~세종~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
-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서울에서 천안·조치원과 세종 정부청사를 잇는 전철 운행
- 경부선 국철 노선에 준고속열차를 투입해 서울과 세종을 60분대에 이동하도록 연결
- 세종~청주 간 고속도로도 조기 착공

수도권 30분대 생활권,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

01. GTX 플러스(+) 프로젝트로 30분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GTX-A·B·C 노선 신속 추진, 3기 신도시 '선 교통, 후 입주' 원칙 준수
- 기존 노선과 연계한 GTX+(플러스) 노선 연장으로 수도권 교통혁명 추진

GTX-A+ : 평택~동탄~용인~성남~삼성~서울역~연신내~킨텍스~운정
 GTX-B : 송도~부천~서울역~청량리~갈매~별내~마석
 GTX-C+ : 평택~오산~수원~의왕~금정~인덕원~과천~삼성~청량리~의정부~덕정~동두천 / 오이도~안산~금정
 GTX-D : 김포~부천~강남~하남~팔당
 GTX-E : 인천~시흥·광명신도시~서울~구리~포천
 GTX-F : 파주~삼송~서울~잠실~위례~광주~이천~여주

- 경기 철도망 추가 구축 지원
 -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인양까지, 3호선 북부를 대화~금릉~경의·중앙선으로 연결, 남부는 성남~용인~수원으로 연장, 경강선 연장, 신안산선 연장, 신분당선(호매실-봉담) 연장, 1호선(경부선) 연장(서동탄역~동탄역) 및 솔빛나루역 신설, 동탄~부발선 연장
 - 5호선(방화~김포), 6호선(신내~구리~남양주), 7호선(옥정~포천), 8호선(성남판교~서현~광주오포), 9호선(강동~하남~남양주), 인천 2호선 김포~고양 연장과 고양~은평선 신설 추진
 - 소사~대곡선의 파주 연장 조기 마무리, 금천~광명선 신설 추진
 - 별내선(남양주 별내~구리~암사~성남~모란)과 월곶~판교 복선전철 차질 없이 추진
 - 수도권 내륙선(동탄~안성~청주공항)과 부천 대장~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 추진
-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 적극 지원
-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 지하화 추가 검토
-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, 경기 남부 공항 건설 추진
- 경부선 철도(서울역~구로역~인양역~당정역) 구간 지하화 추진
- 경기도형 수요응답 교통수단(DRT) 공영제 도입
 - 도심엔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, 농촌엔 경기도형 수요응답원택시로 이동권 보장

02. 1기 신도시를 고품격 스마트 신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.

- 1기 신도시(분당·산본·일산·중동·평촌) 특별법 제정
-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
- 용적률이 500%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, 인허가 신속 진행
 -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, 수직증축 허용
 -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확대
 - 종 상향 추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
-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,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 거점화
- 트램·드론·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 도입

03. 첨단산업 반도체 허브로 젊은 일자리가 가득 찬 경기 남부를 만들겠습니다.

-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'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'로 육성
 - 광명·시흥 : 첨단산업과 제조·유통·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
 - 판교 :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 육성
 - 용인 :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, 용인 플랫폼시티 지속 추진
 - 화성, 오산, 기흥, 평택, 이천 등 경기 남부 :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조성
 -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
 - 반월·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 노력
-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는 스마트-그린산업단지로 전환
- 기업 사용 전력 100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 지원
- 공공의료원 확대로 거점별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

04. 경기 북부의 희생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추진
- 평화경제특구법 제정,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접경지역 성장 촉진 기반 마련
- DMZ 보존과 관광 활성화 동시 추진
 -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
 - DMZ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 설립
 - 도라산,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(포천·연천)의 역사·문화·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확대
- 지역별 산업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발전 모색
 -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신속 조성
 - 의정부 K-POP, 포천 물류·가구단지, 파주 메디컬, 고양 방송·영상 클러스터 사업, 구리 AI 플랫폼 시티 사업 적극 지원
-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 추진
-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, 접경지역의 간선 교통망 확충
 - 교외선 고양시~의정부 구간과 탑석~별가람~별내를 잇는 의정부~남양주 구간 연결 적극 지원
 - 경원선 백마고지~군사분계선 연장 사업 조속 재개
 -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~연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
 -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~연천 구간 정비 적극 지원
 -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한 KTX와 SRT 접경지역 운행 방안 검토
- 공공의료원 확대로 거점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

-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 지원
- 경기도 대표 지천인 안양천, 안성천, 오산천, 경안천, 수원천, 안산천, 역곡천, 탄천, 복하천, 왕숙천, 공릉천, 신천, 계양천, 중량천, 문산천,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적극 지원
-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 지원
- 공공의료원 확대로 거점별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
- 경기도 구도심 전선 지중화로 도시경관 및 보행 환경개선 추진
- 경기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·돌봄 국가(광역) 책임제로 보육 격차 해소
 -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

05.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싱그러운 경기 동부와 서부를 만들겠습니다.

-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, 보전 불가피 지역은 더 크게 보장
-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
 - 하남~양평간 고속도로, 국도3호선의 이천~여주 사업, 수서~광주, 여주~원주 복선전철 사업 차질 없이 추진
 - 하남~남양주~포천 고속도로 신설 적극 추진
-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 및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 지원
-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생태친화적 문화·관광 허브 구축

평화시대 선도, 디지털·그린 뉴딜의 메카 강원도!

01.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평화시대, 북방경제를 이끌겠습니다.

-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적극 추진
-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
- 평화경제 협력모델 정립
- 공동 자원개발 지속 추진
-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
- DMZ 평화생태관광 추진

02. 바이오·헬스 융복합 벨트 조성 및 수소·풍력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으로 강원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.

- 바이오·헬스 융복합 벨트 조성
- 디지털 공공 데이터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
- 정밀의료 데이터산업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한 바이오·의료 분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
-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설립 적극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·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
- 초광역권 협력사업으로 의생명 중심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
- 수소·풍력·바이오 등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
- 액화수소 산업 적극 육성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
- 플라즈마 활용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
- 동해바다의 깊은 수심과 풍부한 풍량을 활용한 풍력발전 추진
- 국가 전략 미래 에너지원 인공태양 클러스터 조성

03. 강원도를 '바다가 있는 스위스'로 만들고, 강원도형 첨단 농업 시대를 열겠습니다.

-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·산악·내륙 관광 활성화
- 강원도를 종합 레저와 휴양을 위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
- 강원도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 산악 관광 활성화 추진
- 호수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및 관광레저 활동 적극 지원
- 동해안 일대 국가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 추진

- 해양레저휴양관광특구및 해중·해저 관광 인프라 구축
- 일과 휴양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 K-위케이션 거점 조성
- 강원도형 첨단 농업 육성
- 동해안권 식품·생명 산업단지 조성
- 농업+공학+융합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
- 폐광지역 및 고원지역의 웰니스, 향노화 산업 집중 육성
- 세계 수산업의 블루칩, 대서양 연어 양식 클러스터 조성

04. 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위한 기반시설(SOC)을 확충하겠습니다.

- 균형발전 기반 조성 및 북방경제 진출 핵심 거점 구축
- 동서고속화철도, 동해북부선철도, 홍천~용문선 철도, 원주~철원 철도 건설 등 철도노선과 제천~영월간 고속도로, 제2경춘국도 건설 등 교통망 추진
- 제천에서 원주~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, 영월~태백~삼척 고속도로, 속초~고성 동해고속도로, 춘천~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, 제2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교통 인프라 적극 추진
-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 춘천, 원주 연장 적극 추진
- 강원내륙고속도로(화천-양구-인제-평창-영월) 적극 추진
- 동해국제관광특구와 연계, 양양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

05. 폐광 및 접경지역 경제지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폐광지역을 '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'으로 지정하여 선제적 지원
- 강원랜드를 고품질의 문화공연, MICE 산업 등 문화관광콘텐츠 중심의 복합리조트로 적극 육성
- 접경지역은 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, 혁신 기업도시를 조성해 주민 피해 최소화
-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'접경지역지원특별법' 개정 추진
- 접경지역 균형병에 대한 디지털·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추진

06. 강원형 미래 대학도시를 구축하고,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- 지역일자리,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원형 미래 대학도시 구축
- 강원도 미래비전에 걸맞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

사람과 경제가 함께 꽃피는 충북!

01.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·양육 지원 확대로 '지속가능한 충북'을 이루겠습니다.

- 도내 모든 신생아에 매월 5년간 양육수당 월 70만원 지급
- 남성육아휴직 정착 기업에 6개월간 월 50만원 추가 지원
- 충북형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(모두의 돌봄)
-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맞는 충북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02. 철도·도로 교통망 구축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'소통·균형발전 공동체 충북'을 구현하겠습니다.

- 충청내륙고속화도로(영동~단양) 조기완공
- 청주~증평~음성~충주~제천, L=57.8km
- 내수~미원~보은~영동, L=72.6km
- 청주도심 관통 충청권 광역철도(대전~세종~오송~청주도심~청주공항)와 수도권 내륙선(동탄~안성~진천~청주공항) 조기완공
- 대전~세종~오송~청주도심~청주공항, L=51.6km
- 동탄~혁신도시~청주공항, L=78.8km
- 중부내륙철도 지선(감곡~혁신도시~청주공항)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성사
- L=29km, 단선철도
- 청주교도소 확장 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
- (중부내륙철도 지선)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계속 추진

03.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활용지원시설 구축으로 '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컨트롤 타워 충북'을 이루겠습니다.

-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연관 사업 조성
- 연관 사업체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을 대거 유치
- 방사광가속기 DNA(Data-Network-AI)센터 구축
- (설계·기획) 구축설계 및 공유플랫폼 기획
- (지원모델개발) 공유플랫폼·AI 기반 활용지원 모델개발
- (구축) 전용건물, 공유플랫폼, IT인프라 등

-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시설 구축
- 연구공간, 기업 입주공간, 이용자 숙소 구축으로 방사광가속기 활용 극대화, 연구성과 공유·확산 및 전문인력양성

04. 오송·충주 국가산단 건설을 통하여 '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 충북'을 완성하겠습니다.

- 바이오 국가산단단지 조기 조성(오송, 충주)
-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
- 바이오의약품 제조분야 실무·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센터 건립
- 오송 바이오-Tech 타운 건립
- 바이오 스타트업·벤처 초기 보육, 액셀러레이팅, 투자, 사업화 지원 등

05. 청년이 모이고, 청년이 살기 좋은 '청년 충북'을 이루겠습니다.

-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'청·포·도 충북' 구현
- 청년 취업을 응원하기 위한 면접 지원 서비스 추진
- 구직중인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 면접 시 첫 면접수당 5만원 지급
- 입사 면접용 정장 무상 대여 및 코디 컨설팅
- 권역별 첨단 기업 유치와 맞춤형 지역인재 채용문화 확산 및 지원
-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역 첨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충북도-지역대학-경제단체가 연계한 상생인재 협의체 구성
- 청년 월세 상시 지원
- 현재 한시 특별지원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임기 내 상시 지원하고, 대상 확대
- '애들이 아침 먹자' 프로젝트
- 충북 내 19개 대학 1,000원 아침밥 제공, 「충청북도주식회사」를 활용한 지역 내 쌀 및 농산물 우선 공급
-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
-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가입
- 26세 이하 남성 HPV(가다실) 백신 무료 접종
- 26세 이하 남성 청년 선착순 1천명에게 HPV 백신 접종 지원

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 충청남도를 만들겠습니다!

01. 디스플레이 · 미래 자동차 산업 · 스마트 국방으로 이어지는 충남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천안 · 아산 지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, 전문인력 양성 지원,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세계 글로벌 디스플레이 허브로 조성
- 첨단투자지구 지정하여 국내 · 외 첨단 투자 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
-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및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
- 농업의 과학화로 내륙지역 활성화,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연수와 벤처 지원, 농업의 브랜드화와 전문화 추진

02.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.

- 충남 대산에서 천안 ·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(총 330km 건설 / 정차역 12개소)
- 보령에서 부여 · 청양 · 공주 · 세종을 거쳐 충북선과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(보령선) 건설(78.5km 단선전철)
-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고 GTX-C 천안 아산연장으로 충남과 수도권 중심도시와 1시간 통근권 구축
- 천안아산KTX 역사에 광역버스, 택시, 전철 등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설립 및 산업지원, 관광 시설, 상업 시설, 공공문화복지 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거점기능으로서의 역할 강화

03.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가로림만 해양정원 · 해상교량 건설, 서산 및 태안 가로림만 일원(159.85km²)에 해양생태계 보전 · 이용 및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~서산시 대신읍 독곳리에 해상교량 건설
- 천수만 부남호 일원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, 수중암거 설치, 갯벌 복원,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역 조성, 방조제 보강 등 추진
- 금강하구 갑문 부분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실시하여 하구 생태복원을 추진 취 · 양수장 시설을 감인하여 단계적으로 생태복원 추진

- 서천 브라운필드 재자연화, 생태습지 조성, 근대화 산업 치유 역사관 건립 등 추진
-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등 5개섬(원산 · 삼시 · 고대 · 장교 · 효자)을 연계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

04. 충남 수소에너지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'정의로운 전환'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보령, 당진에 수소특화단지 조성, 친환경 수소 생산기지 구축, 그린수소 생산 실증 추진, 생산된 수소의 출하 · 유통 거점 확대 등 수소 생산 · 유통 인프라 구축,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· 수소터빈 발전소 등 친환경 전력 공급기지 구축, 그린수소 수전해 원재료 · 소재 · 부품 기업 유치 등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
- 수소산업 육성 전담기관 설립, 수소특화단지 내 수소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관련 기업 · 기관 집적화 및 지역 역량 · 경쟁력 강화
- 노후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수소터빈 발전소로 '정의로운 전환' 지원
- '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폐쇄(예정)지역 '기후대응기금' 우선배정

05.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.

-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
- 혁신도시의 특화산업 육성과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로 조성

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 · 농생명 수도 전북! 새로운 산업 · 문화 · 교통으로 전북을 확 바꾸겠습니다.

01.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그린 수소 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을 만들겠습니다.

- 새만금 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 수소 소재 · 부품 · 장비 산업 육성 등 그린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
-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「RE100 산업단지」로 조성하고 새만금 권역 전체로 확대
-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서해안 데이터 센터 집적지 조성
- 산림면적이 70%가 넘는 전북을 산림 바이오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에너지 수익 모델 창출

02.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.

-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동익산~완주 산업 선로 구축으로 농식품 수출기지 물류 기반 조성
- ICT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원 순환형 K-스마트팜 확대하고 혁신 지원
- K-Seed 밸리 조성 · 동물용 의약품 산업화 플랫폼 · 미생물 산업 고도화 등 3대 기반을 구축하고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

03. 자동차 · 조선 등 주력산업 부활! 금융 · 탄소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은 키우겠습니다.

- 군산과 완주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모빌리티 실증단지 개발해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
- 특수목적선 중심의 선진화 단지 조성하고 첨단 해양 장비 산업 육성
- 탄소 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전주를 세계적인 탄소소재산업 중심도시로 견인
- 금융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 다중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「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」 추진

04.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전주의 전통문화 · 익산의 고대문화 · 군산의 근대문화를 연계하여 전북권 역사 · 문화 관광벨트 조성
- 후백제 · 마한 · 가야 등 문화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해 역사 · 문화 체험 공간 확충

- 동부산악권은 산악정원과 치유고원을 포함한 관광휴양벨트를 추진하고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등을 통해 단절된 동서 지역간의 화합 상징공간으로 조성
- 전북 서해안권에는 새만금과 4개 시군을 연계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해양관광 생태계 구축
- 다양한 생태문명자원을 활용한 생태문명원 건립과 한국 정원산업 지원센터 조성을 적극 지원
- 국립 전북 스포츠콤플렉스를 건립하여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훈련과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05. 전북의 성장을 위한 교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- 익산~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지원
- 부안~고창 노을대교 조기착공 추진
- 새만금~전주완주 혁신도시 연결도로 노선승격 및 확장 지원
- 전주~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로 영호남 상생 화합의 철길 조성
- 전북을 단일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전철처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

06. 새만금을 전북 발전의 견인차로 만들어 그 혜택을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하겠습니다.

- 새만금에 도로, 항만, 공항 등 SOC를 조속히 완성
- 국제 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전북을 비상시키는 성공적인 지역개발 모델로 활용
- 글로벌 집중 투자지역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디즈니랜드 테마파크, 텍사스 국제 리더십 학교 적극 유치
- 크루즈와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 리조트 건설
- 사람이 모이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주변에 국립해양문화사실 추진

07. 명실상부한 제3금융 중심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.

-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 집적화로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
- 금융 타운에 자산운영지원 관련 기능을 확충을 통해 지역 기반의 특화된 금융 중심 모델 추진
- 국책은행 이전 및 금융 공공기관 이전 추진
- 퇴직연금과 공적연금기금 유치에 적극 노력해 자산 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발돋움

전환적 성장과 첨단산업 시대 신해양·친환경 중심지 전남으로 만들겠습니다.

01. 전남의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에 힘쓰겠습니다.

-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양질의 대학병원 의료서비스 제공
-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속한 설립 지원
- A산업과 바이오헬스 산업이 융복합된 면역중심 의료-의약-치유 연계 메디컬 혁신밸리 조성

02.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거점 전남에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신안과 여수 등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발전
-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을 지원하고, 해상풍력 에너지 연구기반 마련
-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허브스테이션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수용인프라 확충

03. 누리호 고향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.

- 고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을 지원하고 시험인증을 전담할 우주발사체 종합지원센터 설립
- 항공우주연구원 전남분원(발사체본부) 설립
- 우주발사체와 소재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동부권에 구축해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육성
- 전남의 우주발사체와 소재산업,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연계된 우주산업초광역벨트 조성

04. 전남을 문화·해양·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.

-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인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로 조성
- 전남의 섬과 해양자원의 특성을 살린 인간친화용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
-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및 국가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지원

05.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(COP33) 영호남 공동유치를 적극지원하겠습니다.

06. 전남·광주 경제공동체 추진! 남부권 초광역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.

- 남해안 소재산업벨트 조성
-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, 영·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구축
- 전남·전북·제주의 RE100 재생에너지산업벨트 구축
- 전남·광주 경제공동체 추진

07.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추진! 전남발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및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
- 전남 과학기술진흥원 및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 건립
-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
-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
- 여수국가산단과 대불국가산단을 산단대개조사업을 통해 첨단 친환경 신소재 국가거점으로 육성

08. SOC르네상스 서울·전남·제주 JTX 건설 추진! 전남이 환태평양시대 관문으로 도약합니다.

- 호남선 KTX 2단계 조기완공
- 전라선 고속철도, 경전선 보성~순천간 고속철도화
- 광주~화순 광역철도, 광주~고흥 고속도로, 영암~진도 고속도로 건설
- 광주~대구 간 달빛철도 조기 완공
- 목포~부산 간 남해안철도 조기 완공
- 서울~전남~제주 JTX 건설 추진

9. 전남문화컨텐츠, K-관광시대! 전남관광 1억명 시대를 열겠습니다.

-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
- 국제 E-스포츠 대회 유치 및 K-POP 슈퍼콘서트 개최
- 해양레저 해안 관광루트 및 플랫폼 구축
-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건립
-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

10. 전남농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! 농수축산 융복합벨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.

- 다원적가치 실현을 위한 전남 농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및 청년농·어업인 1만명 육성
- AI·빅데이터 기반의 국가 첨단농산업융복합단지 조성
-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남도장터 법인화를 통한 유통활성화
- 김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마른김 품질관리제 시행
-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추진
- 전남 친환경농업 1000억 매출 및 유기농 생태마을 100곳 육성

11. 국립의과대학 유치! 도민제일주의 전남행복시대를 이루겠습니다.

- 전남의 숙원인 국립의대 유치
- 어려운 도민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
- 전남 정착청년을 대상으로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도입
-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
-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
-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활동지원금 신규 지급
-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

‘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’ 산업구조 대전환,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

01.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.

- 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형 친환경으로 전환
-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금융·세제 지원 추진
-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자동차 연구소 등을 연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기존 종사자 재교육 시스템 구축
- 식물·미생물 활용 화이트바이오 섬유산업 지원 추진

02. 구미-포항권 이차전지·소재산업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구미의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과 포항의 배터리 ‘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’가 결합된 이차전지·소재산업 벨트 구축
- ‘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’ 이행 지원
-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

03. 글로벌 백신·의료산업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경북을 글로벌 백신·의료산업 벨트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 지원
- 경북 ‘백신첨단 투자지구’ 및 ‘백신규제 자유특구’ 지정 추진

04. 경북 동남권 과학·기술 중심의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포항의 3·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가속기의 첨단과학 기술산업 활용
- 동남권에 ‘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’를 조성하여 우수 인력 일자리 창출
- 100메가전자볼트(MeV)인 경주 양성자가속기의 규모 확대
- 포항 수소산업을 위한 투자 확대

05.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문경~김천 내륙철도(4차 국가철도망계획), 수서~김천~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(에타면제 선정)의 차질 없는 추진
- KTX 구미역 신설
-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
- 남북 6축 고속도로 중 영천~봉화 구간 단계적 추진

06. 대구경북통합신공항·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-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부내륙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
- 대구경북선(서대구~신공항~의성) 추진 지원
- 구미역~통합신공항철도(구미역~신공항~포항/1차 구미역~의성구간) 추진
- 울릉공항 적기 완공

다시 뛰는 신성장동력, 경남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.

01. 진해신항, 가덕신공항, 대륙철도 기반의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.

- 스마트 대형항만 진해신항 조기 착공
- 진해신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항만공사 설립
- 창원산업선 및 진해신항선 구축

02.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 및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
- 진주~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
- 준고속철도 연장운영, 광역급행열차 신규 도입
- 창원~김해~양산~울산 동남권 순환철도 신속 추진
- 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 재정사업 적극 추진
- 부울경 통합환승체계 구축
- 창원~동대구 고속철도 신설 및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
- 남해~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

03. 경남을 방위산업,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- 전국최초 방산혁신클러스트 시범사업 착수
- 방산 관련 지역특화형 소·부·장 및 뿌리산업 동반성장으로 일자리 창출
-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트 조성
- 경남 항공우주제조혁신타운 조성
- 항공기 종합정비(MRO)산업 경쟁력 강화

04.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남형 조선산업, 그린산업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친환경 저·무탄소 선박 실증화 클러스트 구축
- 무인선박규제특구, 중소형특수선박 고도화 지원플랫폼 구축
- 한국형 스마트아드 핵심기술 개발
- 중소기업주도의 해상풍력설비 특화단지 구축
-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

- 수소생산, 저장, 수송, 활용 등 수소 산업망 구축 및 육성
- 원전해체기술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 개발
- 창원, 김해 수소트램 건설 지원

05. 보건의료·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경남지역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의료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수혜권 보장, 질병 극복 일등광역권 구축
- 방문외래센터 설치: 1차의료 취약지(9개 시·군)에 의료 외래이용 가능 센터 신설
- 産전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시행: 임신~생후 2세 산모 지원, 전문간호사 가정방문
- 보건소 감염병센터 설치: 도내 보건소 전체에 대한 감염병·질병 극복체제 확산
-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착공
-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
-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출산·육아, 요양·돌봄을 포괄하는 통합적 서비스 강화
-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
- 센터 지정 및 국비 지원액 상향 조정
- 경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및 정원확대
- 전국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의대가 없는 창원시에 의대 신설 필요

탄소중립 · 폐기물제로 · 자원순환 선도! 평화 · 자주 · 환경의 수도 제주

01. 폐기물 제로,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.

-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
- 제주 지하수 보호 및 물관리체계 혁신
- 제주 순환자원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환성장 기반 마련

02. 제주4·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.

- 지속적인 진상조사와 평화·치유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대폭 확대
- 4·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
-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 추진 지원
-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적극 지원

03.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-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
-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-지방정부간 협력모델 구축
-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

04. 상급종합병원 지정,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로 도민건강권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상급종합병원 지정
- 감염병전문병원 설치

05. 일과 휴식, 지역경제도 살리는 워케이션 성지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워케이션 최적지 자리로 적극 지원
- 제주 어디서나 원격근무 가능토록 디지털 기반 구축
-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워케이션센터 조성
- 워케이션과 연계해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 지원